

## 중국의 부상과 주요국의 대응전략 : 헤징전략을 중심으로

- 일시 | 2012년 5월 22일 (화) 오후 2:00-5:00
- 장소 | 평화재단 2층 강당
- 주최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 ■ 프로그램

13:30 (30) 접 수

14:00 (5) 개 회

14:05 (5) 여는말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14:10 (10) 사 회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14:20 (20) 발 표 1 **미-중 강대국 상호 헤징과 남북한 한반도 정치**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14:40 (20) 발 표 2 **북한의 자주-의존의 딜레마와 헤징전략**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5:00 (10) 토 론 1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5:10 (10) 토 론 2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5:20 (15) 휴 식

15:35 (75)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16:50 (10) 닫는말

17:00 폐 회

## 차례

인사말		3
발표 1	미-중 강대국 상호 해징과 남북한 한반도 정치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5
토론 1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2
발표 2	북한의 자주-의존의 딜레마와 해징전략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25
토론 2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9
참고문헌		53

## 인사말

최근 남북한의 대결 국면이 주변국들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특히 미·중간 대립구도가 다시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결적 국면에서는 그 희생자가 남북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의 ‘통미봉남’이나 ‘통중봉북’이라는 논의와 인식은 문제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있어 동북아시아의 힘의 한 축으로서 부상하는 중국을 등한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처하는 주요국들의 전략의 하나로 ‘위험 분산화’라고 하는 헤징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세안 국가와 같은 중약국의 대응전략으로 여겨지는 헤징전략이 미·중 상호관계에서도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대중국전략으로 헤징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논의도 북한의 대외인식과 대응자세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헤징전략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 간 상호행동들이 남북한 당사자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상하는 중국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5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김형기



# 미-중 강대국 상호 헤징과 남북한 한반도 정치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I. 서론

II. 미-중 강대국 헤징전략과 안보 딜레마

III. 미-중 강대국 상호헤징과 남북한 한반도 정치

IV. 결론

## 미-중 강대국 상호 헤징과 남북한 한반도 정치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I. 서론

미국과 소련,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체제 경쟁으로 상징되었던 냉전체제가 종식된 지도 20여 년이 흘렀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국제정치에서 목격되었던 크고 작은 현상들 중에서 국제정치의 한복판을 관통하는 도도한 시대적 추세를 꼽으라면 단연 힘의 대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 패권의 축소와 소위 나머지 국가들의 부상으로 기존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글로벌 정세를 부각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을 예고하고 있다.

힘의 대전환 및 나머지 국가들의 부상과 관련하여 지역 차원을 뛰어넘어 글로벌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가 바로 중국의 부상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국제정치에서 오랜 시간동안 동면에 들어갔던 중국이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 국제정치의 지각판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이제 국제정치의 중심 무대도 미국과 유럽 중심의 대서양에서 중국과 인도로 상징되는 아시아로 중심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21세기 아시아 지역이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등장하면서 이 지역의 안보질서는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sup>1)</sup>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동북아 안보질서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중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특성과 그것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여기에서는 미-중 강대국 정치에 있어서 대안적 안보전략으로 나타난 미-중 상호헤징(reciprocal hedging)의 성격과 그것이 동북아 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미-중 강대국 정치가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남북한 한반도 정치가 구조적으로 미-중 동맹정치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남북한 동맹 유형의 차이에 따른 안보 자율성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미-중 강대국 정치가 남북한의 안보 자율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미-중 강대국 헤징전략과 안보 딜레마

### 1.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의 등장 배경

원래 헤징이란 표현은 ‘헤지펀드(hedge fund)’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의 금융 영역에서 일반화된 것을 국제정치에서 차용해 온 용어이다. 따라서 위험 분산화를 의미하는 헤징이란 상이한 결과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 옵션들을 추구하여 행위자가 위험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헤징전략이란 강대국의 안보전략이라기보다는 균형, 편승 혹은 중립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대안에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소국들이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하는 일련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상대적 약소국가들은 다른 것을 희생하여 어느 하나(혹은 명백한 정책 입장)를 선택하는 것을 선제하거나 이를 피하는 중간적 입장을 개발한다.<sup>2)</sup> 그러므로 헤징전략은 안보 상황의 불안정성과 상대 국가의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자신의 상대적 능력 제약으로 국가의 최

---

1) Aaron L. Friedberg, "The Geopolitics of Strategic Asia, 2000-2020," in Ashley J. Tellis, Andrew Marble, and Travis Tanner(eds.), *Asia's Rising Power and America's Continued Purpose*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0), pp. 25-44.

2) Evelyn Goh, "Understanding hedging in Asia-Pacific security," *PacNet 43*, August 31, 2006, p. 2.; Evelyn Goh, *Meeting the China Challenge: The U.S. in Sou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Policy Studies 16 (Washington: East-West Center, 2005), p. viii.

중 목표 설정과 그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떨어지는 중견국가들이 채택하는 안보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가들에게 있어서 헤징전략이란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무정부의 국제정치에서 일반적으로 강대국가들은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세력균형정책을 취한다. 체제 수준에서 세력균형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했을 경우 체제의 안정성이 유지되어 국가들은 권력이나 자원의 손실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대국가들과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세력균형의 역동성은 지역체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특히, 지역체제 수준에서 부상하는 국가가 등장했을 경우 체제 수준의 강대국가나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전쟁 예방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세력분배를 위해 경성균형전략을 취한다.

그러나 2006년에 들어와 부시(Bush) 행정부는 아시아 안보전략, 특히 대중 접근 방법으로 헤징전략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sup>3)</sup> 이를 계기로 오늘날 적어도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헤징전략은 강대국의 대안적 안보전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구적 강대국인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세력균형의 경성균형전략을 취하기보다는 균형과 통합으로 구성되는 헤징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차원을 넘어 지구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해 세력균형전략보다는 변형된 세력균형 및 헤징전략을 채택하고 있다.<sup>4)</sup> 지구적 강대국인 미국과 지구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중국이 상호헤징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미-중 관계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세력균형이론에서 벗어난 이러한 미-중의 상호헤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세력균형이론의 관점과는 달리 강대국가가 헤징전략을 취하도록 유인하는 특정의 영역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강대국 정치에서 상호헤징 행태가 등장하게 된 첫 번째 영역 조건으로 지구화를 들 수 있다. 냉전 이후 국제정치에서 그 위력이 보다 부각되고 있는 지구화의 물결은 국가들의 능력과 자율성, 세력균형, 그리고 갈등의 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5)</sup> 특히, 지구화는 자유주의적이고 시장 가치적 국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비서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경제적 지구화의 영향으로 상호의존의 심화와 초국가적 관계 증대는 강대국들의 경쟁이 생존 문제와 직결된 군사안보가 아닌 국가의 성

---

3)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6, 2006;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6, 2006

4) Evan S. Medeiros, "Strategic Hedging and the Future of Asia-Pacific Stability," *The Washington Quarterly*, 29-1(Winter 2005-2006), pp. 145-67; Atanassova-Cornelis, Elena, "Reshaping the East Asian Security Order: US-China Hedging and the EU's Strategic Choices," *Ritsumeikan International Affairs*, 10(2011), pp. 219-42.

5) Jonathan Kirshner(ed.), *Globalization and National Security* (New York: Routledge, 2006), pp. 1-33, 321-40.

장과 부의 창출이 강조되는 희소성의 경쟁<sup>6)</sup>으로 전환되어 과거와 같은 세력균형정책을 추진하기가 보다 힘들게 되었다. 즉, 냉전 이후의 국제안보환경에서 강대국 정치는 군사안보가 아닌 지정학적인 희소성의 경쟁으로 전환되어 군사안보가 희소성의 상품이 아닌 환경에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세력균형정책이 작동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강대국 정치에서 상호헤징 행태가 등장하게 된 또 다른 영역 조건은 국가들 간의 힘의 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세력 변화이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 국력의 쇠퇴와 나머지 국가들의 부상(the Rise of the Rest)으로 국제체제는 힘의 대전환을 겪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sup>7)</sup> 특히, 나머지 국가들의 부상 중에서 동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중국의 부상은 21세기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전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역내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과 향후 중국의 대외 행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안보전략 차원에서 그 대응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오늘날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헤징전략은 미-중 강대국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이와 맞물려있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대안적 안보전략으로 각광받게 되었다.<sup>8)</sup>

## 2. 미-중 강대국 헤징전략의 특징과 안보 딜레마

2006년 부시(Bush) 행정부에 의해 대중 헤징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이후 미국의 대중 헤징전략은 관여에 의한 통합과 균형이라는 이중노선(two-track)의 교차적 순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 패권적 힘의 축소과정을 겪는 상황에서<sup>9)</sup>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은 역내 국가들에게는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부상하는 중국의 명확한 의도(중국은 단순한 발전 국가인가? 지역의 위협국가로 나갈 것인가? 미국에

6) Randall Schweller, "Realism and the Present Great Power System: Growth and Positional Conflict over Scarce Resources," in Ethan B. Kapstein and Michael Mastanduno(1999), pp. 28-68.

7) Fareed Zakaria,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8); Christopher Layne, "The Waning of U.S. Hegemony-Myth or Realist?: A Review Essay," *International Security*, 34-1(Summer 2009), pp. 147-172.

8) 동아시아 안보구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과 중견국의 헤징전략의 유사성과 차별성,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수형, "동아시아 안보구축에서 강대국과 중견국의 헤징전략과 이중적 안보 딜레마," 미발표논문.

9) Christopher Layne, "Graceful Decline: The end of Pax Americana," *The American Conservative*, 9-5(May 2010), pp. 30-33; Paul K. MacDonald and Joseph M. Parent, "Graceful Decline?: The Surprising Success of Great Power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35-4(Spring 2011), pp. 7-44.

대해 균형을 취하는 공격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국제정치에서 양극체제로의 회귀를 원하는 헤게모니를 추구할 것인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선불리 중국의 의도를 예단하여 전통적인 세력균형정책을 취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부담과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sup>10)</sup>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통합과 균형이라는 대중 헤징전략을 통해 현존 국제체제로 중국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지속심화시켜 나가고,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건설적이고 평화적인 역할을 고무시키며, 중국의 인권법치 및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도력을 유지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의 자유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헤징의 목적은 중국의 부정적 선택의 위험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긍정적 선택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sup>11)</sup>

이와 마찬가지로 부상하는 중국 역시 지구적 강대국인 미국에 대해 헤징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대미 헤징 행태를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미국 시장과 투자, 그리고 기술에 대한 지속적 접근이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건과 지역적 열망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이고 최대의 위협은 미국이라는 이중적 인식에 따른 결과이다.<sup>12)</sup> 그러나 미국의 대중 헤징과는 달리 중국의 대미 헤징전략은 양국의 권력 위계상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권력 지위를 다른 강대국들보다는 강하지만 미국에는 훨씬 약한 것으로 파악한다.<sup>13)</sup> 즉, 중국은 미-중 관계를 지구적 강대국인 미국과 지역적 강대국인 중국이라는 권력의 위계적 이중주(hierarchical duet of power)<sup>14)</sup>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

10) 중국 외교정책의 의도와 목표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미국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미-중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완전한 국가적 잠재력을 달성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의 성공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므로 중국은 미국의 지배를 완화시키는 세력 중심의 발전을 고무시켜나가야 한다. 자신을 제약하고자 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관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아시아에서 강한 쌍무적 정치·경제 관계를 조장하고 지역적 다자능력을 만들어내는 이니셔티브를 강화하여 미국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체제에서 강대국 지위를 추구하면서도 중국의 책임과 체제 유지비용을 제한하면서 발전국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중국은 서태평양과 특히 대만을 둘러싼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접근을 차단, 좌절, 그리고 지연시키기 위한 비대칭 군사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Abraham M. Denmark, "China's Arrival: A Framework For A Global Relationship," in Abraham M. Denmark and Nirav Patel(eds.), *China's Arrival: A Strategic Framework For A Global Relationship*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09), p. 162.

11) Abraham M. Denmark(2009), pp. 159-80.

12) Evan S. Medeiros(Winter 2005-2006), pp. 153-54; Rosemary Foot, "Chinese Strategies in a US-hegemonic Global Order: Accommodating and Hedging," *International Affairs*, 82-1(2006), pp. 77-94.

13) Yan Xuetong, "The Rise of China and Its Power Statu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1(2006), pp. 5-33.

14) Evelyn Goh, "US Strategic Relations with a rising China: Trajectories and Impacts on

마찬가지로 적어도 지역적 차원에서는 균형과 통합으로 구성되는 헤징 행태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헤징 행태에서 대미 간접균형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황에 따라 직접적 경성균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 미-중 강대국이 상호헤징 행태를 보이는 것은 상호 세력균형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영역 조건과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연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강대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상호헤징 행태는 임시방편의 안보전략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격 또한 상당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중 강대국 정치에서 보여주는 상호헤징 행태는 생존과 지역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의도 변화를 유인하여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미-중 강대국 상호헤징 행태는 지역의 안정보다는 안보 딜레마를 야기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선 동아시아의 다양한 다자협체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헤징 행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영향력 최소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미-중 양국이 관여에 의한 통합 요소를 강조하더라도 이는 상대적 이득을 중시하는 제로섬 게임 양상을 보일 개연성이 더 높다. 일례로 중국은 1997년에 창설된 APT(ASEAN Plus Three)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도의 배제균형전략과 ASEAN에 보다 관여하기 위한 제도의 포함균형전략을 추구하고 있다.<sup>15)</sup> 반면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관여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미국의 영향력과 이해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16)</sup> 이런 면에서 미국은 ASEAN과의 관계 강화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n Summit)에의 참여를 공식화하고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적극 추진하여 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자 한다.

---

Asia-Pacific Security," in Kevin J. Cooney, Yoichiro Sato(eds.), *The Rise of China and International Security: America and Asia Respo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p. 61.

15) Kai He, "Institutional Balancing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Balance of Power Strategies in Southeast Asi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4-3(2008), p. 509.

16)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189, November 2011, pp. 56-63.

〈표 1〉 미-중 상호 불신의 원천과 영역별 요인

영역 혹은 쟁점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의 인식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패권 및 지배력 유지</li> <li>○ 중국의 부상 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을 대체</li> <li>○ 미-중 관계는 제로섬 게임</li> </ul>
정치가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에 대한 평화진화전략</li> <li>○ 서구화, 국가분열 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위주의체제의 불안정성</li> <li>○ 국내 안정을 위한 국제적 위기 조성 (민족주의 조장)</li> </ul>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의와 협소한 국익중심</li> <li>○ 북한과 이란의 체제변화 기도</li> <li>○ 대테러전은 지역적국제적으로 미국의 이익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규범과 레짐 강화에 책임 있는 역할 미비</li> <li>○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과 이익을 희생으로 지역적 지배 도모</li> </ul>
경제와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경제적 실패 희생양으로 미-중 경제 마찰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상주의적 입장 강화</li> <li>○ 희소자원의 전략적 접근</li> </ul>
에너지와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중동정책은 지구적 오일공급 통제욕망</li> <li>○ 기후변화는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서구의 음모</li> </ul>	
국가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중국의 최대 안보위협국</li> <li>○ 중국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는 대중 포위 전략의 일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 불신은 미국 체제(군 부, 정보기관, 의회)에서 일정 정도 제도화 되어 있음</li> <li>○ 주요 지역에 대한 군사계획의 불투명성</li> <li>○ 사이버안보 영역과 첨단기술에 대한 스파이 행위에 대한 우려</li> </ul>
불신의 원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전통, 가치체계, 정치문화의 상이성(구조적 불신원천)</li> <li>○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부족</li> <li>○ 미비한 힘의 격차에 따른 의도의 불확실성</li> </ul>	

출처: Kenneth Lieberthal and Wang Jisi,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2), pp. 7-38 참조 작성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 자체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중 균형이자 하나의 위협으로 비춰질 수 있다.<sup>17)</sup> 이러한 측면은 바로 전통적 안보 딜레마의 한 원

17) Atanassova-Cornelis, Elena, "Reshaping the East Asian Security Order: US-China Hedging and

인으로 작용하는 오인(misperception)의 문제를 부각시키고<sup>18)</sup> 궁극적으로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미-중 정책결정자들의 오인은 지역적 안보 딜레마를 야기하고 이를 더욱 악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미-중의 상호혜징 행태는 어느 일방이 위협에 대한 필요한 혜징 행태를 취했을 경우, 이것이 타방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어 오인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중의 상호혜징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 불신과 결부되어 관계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 나아가 지역적 안보 딜레마를 강화시켜나갈 휘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강대국의 혜징전략이 안보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논거는 통합과 균형이라는 이중적 교차순환에 있어서 혜징의 균형요소와 전통적인 세력균형에서의 균형요소 간에 차별성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강대국 혜징전략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상대 의도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설사 연성과 제도균형이라는 간접적 균형전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는 언제든지 직접적인 경성균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군사안보적 경쟁에서 강대국 혜징전략에서의 균형은 기본적으로 경성균형에 기초해있기 때문에 이를 혜징 차원이 아닌 세력균형 차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부상하는 중국이 추진하는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이 미-중 관계에서 간접적 균형의 성격이 강하더라도 이는 역내 주변 국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세력균형 차원의 군비증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역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및 대만 문제, 그리고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미-중 간의 크고 작은 마찰과 긴장고조는 기본적으로 경성균형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새롭게 발표한 ‘신국방전략지침(2012년 1월 5일)’<sup>19)</sup> 및 ‘글로벌 교역망 안전을 위한 국가전략(2012년 1월 25일)’<sup>20)</sup> 등에서 나타난 미국의 대중 균형은 혜징의 균형요소가 아닌 대중 세력균형의 경성균형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the EU's Strategic Choices," *Ritsumeikan International Affairs*, 10(2011), pp. 230-33.

18)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 58-67.

19)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7th, 2012.

20)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For Global Supply Chain Security*, January 2012;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구적 공유지(global commons)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Abraham M. Denmark, "Asia's Security and the Contested Global Commons," in Ashley J. Tellis, Andrew Marble, and Travis Tanner(2010), pp. 171-203.

### III. 미-중 강대국 상호헤징과 남북한 한반도 정치

#### 1. 남북한 동맹 유형의 특징

##### (1) 한미동맹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남북한 관계

한국전쟁을 계기로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탄생한 한미동맹은 안보-자율성 교환모델에 따른 전형적인 주둔형 동맹 유형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동맹 탄생 이후 국제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남북 대립, 그리고 한국의 열악한 능력 등으로 한국의 안보 자율성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78년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되어 한미동맹이 보다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동맹의 주된 목적인 대북 억지력은 강화되었지만, 이는 역으로 동맹에 대한 한국의 안보 의존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상대적 안보 자율성을 재고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양국의 국방장관이 대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 양국의 합참의장이 대표되는 한미 군사위원회회의,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1968년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그리고 한국의 월남파병 등 한반도 안보문제 및 한미 양국 간의 군사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 과정에서 구축되었다. 1968년 4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되어 그해 5월 국방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제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되었다.<sup>21)</sup> 한미 군사위원회회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실무기구로서 1978년 7월 제1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창설되었고, 한미 양국 간 군사전략 협의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sup>22)</sup>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한미 연합군사령부는 1977년 7월 26일 제1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권한위임사항(TOR)’과 1978년에 군사위원회에서 하달한 전략지시 1호에 근거를 두고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되었다.<sup>23)</sup>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편성은 양국의 통합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사령관(미군 4성 장군), 부사령관(한국군 4성 장군)외에 지휘부 예하에 7개의 일반 참모부와 6개의 특별참모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동률편성을 원칙으로 지휘부로부터 각 참모부의 장차장 및 과장급까지 한미 요원이 대칭적으로 보임되어 있다. 근

21) 이수형,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구조조정방안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 40집 3호, 2000, p. 388.

22) 유인택,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96), p. 38.

23)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서울: 국방부, 1995), p. 109.

무인원은 한국군 약 280명, 미군 약 260명 내외이다.<sup>24)</sup>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주축이 된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정책과 안보전략에 긍정적·부정적인 이중의 영향을 미치면서 안보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발전·변화해왔다.<sup>25)</sup>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의 안보전략 및 동맹전략 변환에 따라 한미동맹은 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거시적·미시적 동맹재조정 과정을 겪게 되었고<sup>26)</sup>,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한미동맹은 한미 전략동맹으로 전환되어 동맹의 목적과 비전, 군사적 임무와 역할, 그리고 안보활동 영역 등에서 과거와는 달리 동맹의 근본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sup>27)</sup>

이러한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는 한미동맹이 남북한 관계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흔히 포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라는 동맹의 안보 딜레마로 설명된다.<sup>28)</sup> 지난 냉전기 남북관계에서 파생되는 한미동맹의 안보 딜레마가 국제체제의 경직성, 진영 논리의 작동, 한국의 역량 미달 등으로 부차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면, 냉전 종식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미동맹의 안보 딜레마는 보다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더불어 동맹 딜레마에 내재되어 있는 회원국 간 권력의 편차와 지정학적 차이가 회원국 간 안보전략의 차별성과 맞물려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 이후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의 한반도 정치에 미친 영향은 소위 ‘북한 문제의 국제적 쟁점’에 집중되었으며<sup>29)</sup>, 그중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과 그 해법

24) 유인택(1996),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p. 41.

25)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정책 및 안보전략에 미친 긍정적 영향으로는 첫째, 대북 억지와 방위, 둘째, 한국군의 전력보완, 셋째, 한국군의 작전능력 향상, 넷째, 정전협정 유지기능 및 대미협력의 저변 확대, 그리고 한국군의 군사지출의 상당 부분을 절약해준다는 경제적 효과 등이다. 유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강성학 외,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 (성남: 세종연구소, 1996), pp. 113-22.; 반면,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정책 및 안보전략에 미친 부정적 영향으로는 첫째, 한국군의 자주적 국방발전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약화시켰다. 둘째, 연합사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 측면에서 주한미군 전력은 거의 다 배제되어 있음에 반해 한국군은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연합사사령관의 다중적 지위와 복잡한 지휘체계 유지로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안보·군사 관련 정보의 노출로 대미 협상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측면 등이다. 백종천, “한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 방향,” 백종천 외, 『한·미 군사협력: 현재와 미래』 (성남: 세종연구소, 1998), pp. 31-67.

26)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미동맹의 거시적·미시적 동맹재조정의 배경과 이행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수형, “중견국가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노무현정부의 동맹재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2권 제1호, 2009년, pp. 3-27.

27) 한미 전략동맹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한미 전략동맹에서의 잔여통제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수형, “관계적 계약이론과 한미 전략동맹에서의 잔여통제권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 27권 제3호, 2011년, pp. 1-28.

28)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July 1984), pp. 461-95.; 이수형,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pp. 21-38.

29)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이란 탈냉전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외적 환경의 변화 혹은 이 변화와 북한의 내적 상황변화(내부자원 고갈)가 결합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북한과 관련한 국제적인 문제인 것이

을 둘러싸고 남-북-미의 전략적 삼각관계 구도가 형성·변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북관계의 한반도 정치나 북미관계나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치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정치가 유동적이고 불안정할 때 한국의 안보 자율성은 동맹관계와 한반도 정치에서 파생되는 이중적 난관으로 인해 매우 제약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 (2) 북중동맹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남북한 관계

1961년 7월 11월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조중 조약」에 근거해 탄생한 북중동맹은 한미동맹과는 달리 전형적인 정치형 동맹으로 출발하였다. 북한과 중국 간에 맺어진 북중동맹이 주둔형이 아닌 정치형 동맹으로 탄생한 것은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당시 양국의 정치적 긴장관계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김일성은 북한 지역에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국의 영향력 배제에 초점을 두었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전쟁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 지역에 주둔해있던 중국인민지원군은 1954년 9월부터 철군을 시작하여 1955년 10월까지 19개사가 철수했지만, 기본 병력 15개사, 기타 특종병과 부대, 인민지원군 총부, 후근보장부 등 약 25만 명은 남아 있는 상태였다.<sup>30)</sup> 따라서 김일성은 1956년 소위 ‘8월 중파 사건’을 계기로 연안계 및 중국의 영향력 배제를 보다 강하게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당시 북한 지역에 주둔해 있던 중국의 인민지원군의 완전 철수를 이끌어내면서<sup>31)</sup>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공하게 구축해나갔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 한미동맹을 의식하여 북중동맹을 체결했지만, 북중동맹이 정치형으로 탄생하게 된 근본 배경은 김일성의 권력기반 강화 차원에서 국가안보보다는 중국의 영향력 배제라는 정권안보라는 측면이 보다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냉전기 안보 자율성이 극대화된 정치형 동맹의 북중동맹 관계에서 북한은 중국 진영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북한은 1961년 7월 6일 소련과 체결한 「조소 조약」을 바탕으로 소련과의 군사동맹관계를 우선적으로 보증하는 것과 동시에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상대적인 균형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지난

다. 이종석,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발생 원인, 양상, 전망,” 백학순·진창수 편,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성남: 세종연구소, 1999), pp. 17-64.

30)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9), pp. 93-94.

31) 최명해(2009),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pp. 105-06.

냉전기 북한은 정치관계에서 언제나 ‘소련 경사’를 유지했지 결코 ‘북경 경사’를 보이지는 않았다. 냉전시기 소련은 중국에 비해 중요성이 훨씬 큰 북한의 군사동맹국이었으며, 소련의 북한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 역시 중국의 그것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sup>32)</sup>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안보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동맹관계임에도 동맹의 임무나 제약으로부터 거의 완전한 정치적 자율성을 갖고 있는 북중동맹은 군사안보적 동맹으로서의 존재감이 거의 사라졌다. 비록 2001년에 북중동맹의 유효기간이 다시 20년 연장되어 북한과 중국은 명목상의 동맹관계로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오늘날 「조중 조약」은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북중동맹은 가상동맹(virtual alliance)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이러한 북중동맹의 성격과 특징을 고려했을 경우, 북중동맹이 남북한 관계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동맹과의 그것과는 미묘하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북핵 문제를 제외하곤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쟁점 영역에 있어서 북중동맹의 안보 딜레마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과 중국이 ‘동맹 관계’라기 보다는 ‘국가 관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명목적으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의도와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중국의 국가안보의 관문이라는 관념은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절대 바뀐 적이 없으며, 이는 또한 미래에도 불변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조약의 존재를 통해 미래 북한의 변화 상황에 대한 최대한의 다양한 선택을 보유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략적 모호성의 정책과 미래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궤도를 벗어나 러시아나 미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있어서 지정학의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의미는 군사적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한반도 외교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반면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주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32) 주평, “중북관계에서의 동맹요소: 변화와 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중북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과 한미동맹 논문집』, 2011년 9월 1일, p. 35.

33) Andrew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the Limits of Influence," *Current History*, 102-665, September 2003, pp. 274-78.

34) 주평(2011), “중북관계에서의 동맹요소: 변화와 조정,” pp. 38-41.; 중국이 「조중 조약」을 체결한 원인은 첫째, 중소분쟁이 발생한 시점에서 북한이 중국에 반대하는 소련에 가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둘째, 1958년 중국 인민지원군이 북한에서 철수한 후 중국과 북한의 정치·경제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이다. 셋째,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군사주둔에 대한 균형을 희망했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 한반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주평(2011), “중북관계에서의 동맹요소: 변화와 조정,” p. 34.

정치·경제적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정권의 최후 의탁자로서의 중국과 「조중 조약」을 연명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북한의 국제적 쟁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동북아 강대국 간의 상호견제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율적 이익 공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한반도 정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핵문제를 전략적 수단화한 북한에게 있어서 현 시점에서 남북한 관계의 한반도 정치는 부차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 관계에서 남북한 관계의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될수록 한국의 안보 자율성이 제약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게 있어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장기적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단기적 측면에서는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카드로 작용하는 역설(paradox)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2. 상호혜징과 남북한의 안보 자율성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의 냉전기 한반도 안보지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와 이를 외적균형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강대국 정치의 현상유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냉전기에는 우선적으로 체제 변수가 강하게 작동하였기 때문에 남북한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반도 정치는 현상유지라는 강대국 정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남북한의 안보적 자율성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또한 세기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발생한 국제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치에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았으나 한반도 안보지형의 핵심적 변수 중의 하나인 외적균형이라는 강대국 정치의 기본 구조는 변화되지 않았다.

냉전 이후 남북한 중심의 한반도 정치는 현상타파의 안보정책을 추진해왔다. 남북한의 관계 변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이라는 남한의 현상타파 정책이 주로 강대국 정치와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전개되었다면, 북한의 현상타파 정책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군사안보적 성격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계기로 공식화된 북한의 군사안보적 현상타파 정책은 한반도 정치에 이중의 전략적 딜레마를 부과해왔다. 하나의 딜레마가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부과한 것이라면, 또 다른 딜레마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강대국 정치에 부과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한반도 정치에 부과한 이중의 전략적 딜레마의 함의는 그것이 상황에 따라 ‘따로 또 같이’ 작동할 수 있는 남북한과 강대국의 한반도 정치를 구조적으로 일체

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남북한과 강대국의 한반도 정치의 일체화는 역설적으로 강대국 협조체제의 근본적 작동원리인 주체와 객체의 차등적 관계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 객체의 안보자율성을 심히 제약하는 구조적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강대국 정치가 남북한 한반도 정치 및 그에 따른 남북한의 안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여와 통합, 그리고 균형’의 요소를 갖고 있는 미-중 강대국 정치에서 ‘관여와 통합’의 성격이 부각될 경우, 강대국 정치가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그에 따라 남북한의 안보 자율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는 강대국 정치의 파열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남북한 당사자가 보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반도 정치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강대국 정치의 영향이 최소화되었을 경우에도 남북한이 한반도 정치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가시적으로 점증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접근 방법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통적 입장을 도출해내야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관여와 통합’의 강대국 정치는 남북한 한반도 정치의 경색 내지 정체 국면과 결부되어 역으로 남북한의 안보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강대국 협조체제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특히 김정일 사망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유지를 바라는 미국과 중국의 공통적 입장은 그 동기나 목적이 서로 다를지라도 미-중 강대국 협조체제는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미-중 강대국 정치에서 ‘균형’의 성격이 강화될 경우,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는 강대국 동맹정치의 구도로 편입되어 한반도 정치의 자율성이 극히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강화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방위전략 지침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중정책에 있어서 균형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중 동아시아 강대국 정치에서 헤징전략의 균형 요소가 표출된 전형적인 사례로는 2010년 3월 한반도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태, 중일 영토 분쟁을 둘러싼 미-중 관계,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중국과 동남아 관련국가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외교관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미-중 양국이 구사하고 있는 헤징전략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세심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전통적인 강대국 세력균형의 논리로 전환될 수 있는 과도기적이면서도 임시방편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 요소가 강조되는 미-중 강대국 정치가 한반도 정치의 주역인 한국과 북

한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즉, 균형 요소가 강조되는 미-중 강대국 동맹정치에서 북중동맹과는 달리 한미동맹은 미국의 대중 균형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주둔형 동맹 유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도 하다. 그에 따라 한국의 안보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동맹 딜레마에 따른 동맹 갈등이 주기적으로 표출될 개연성도 높은 것이다.

반면 강대국 동맹정치에서 균형 요소가 강조되더라도 이것이 북중동맹 및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동맹과 한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북한에게 유리한 전략적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강대국 정치에서 미-중 균형정책이 부각될수록 북중동맹의 특성을 고려했을 경우 중국에게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둘째, 핵의 국제적 쟁점화를 시도해 온 북한에게 있어서 강대국 정치의 균형정책은 역으로 강대국 간의 상호 경쟁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율적 안보이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강대국 정치의 균형정책을 전략적 기회로 인식, 핵 쟁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반도 정치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드는 동시에 미국 ↔ 북한 ↔ 중국이라는 전략적 삼각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성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강대국 동맹정치가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적으로 한미동맹 관계에 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한국의 안보 자율성 및 입지도 상대적으로 제약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강대국 동맹정치의 파열음으로 인해 한국은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보다는 북한의 한반도 정치의 방향과 입장에서부터 주기적인 민감성과 취약성을 보다 많이 노출시킬 개연성이 크다.

## IV. 결론

21세기에 들어와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힘의 이동은 아시아 국가들의 부상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아시아 정치를 국제정치의 중앙무대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세계적 강대국으로의 부상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 자신의 안보전략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에게 기존 안보전략의 검토와 새로운 대안적 안보전략의 모색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아직도 분단체제의 적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동맹 균형 혹은 편승을 축으로 안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동맹 중심의 안보전략은 우리의 제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경우 어느 정도 나름의 적실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세계적 차원의 국가 단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힘의 이동이라는 일반적 국제정치의 현상과 우리의 핵심적인 안보 지역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의 이동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경우 이제 한국도 기존 안보전략에 대한 검토와 향후 이중적 성격의 한반도 정치에서 한국의 안보 자율성을 증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나갈 수 있는 대안적 안보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미-중 동북아 강대국정치가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미-중 강대국 정치의 관여와 통합 성격이 부각될 경우,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는 강대국 동맹정치의 파열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남북한 당사자가 보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반도 정치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개연성이 높다. 반면 미-중 강대국 정치의 균형 성격이 부각될 경우,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는 강대국 동맹정치의 구도로 편입되어 한반도 정치의 자율성이 극히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균형 성격이 강조되는 미-중 강대국 정치는 한미동맹 및 한국과 북중동맹 및 북한에 사뭇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향후 남북한 관계의 한반도 정치는 미-중 안보적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파열음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 동북아 차원에서 전개되는 미-중 강대국 정치의 다양한 형태와 성격은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미-중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적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서 서로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접근 방법에서 최소한의 공통적 입장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미-중 강대국 상호 헤징과 남북한 한반도 정치  
토론문  
-9/15 시대의 미중관계와 한국외교-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무엇이 문제인가?

- 후쿠야마:

The end of History->The Future of History, Post-Washington Consensus

- 11/9 (베를린 장벽 붕괴)->9/11 (테러) ->9/15 (리먼 브러더스 파산)

- 2011년 TIME 지 선정 올 해의 인물: The Protestor

- 2012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 The Great Transformation: Shaping New Models

- Chimerica, G-2, G-0

- 국내정치 vs. 2012년 미중전략경제 대화

- 2012년 4월 총선 이후 새누리당 [100%국민행복실천본부] <-2007년 대선: 이명박의 성공시대 대 정동영의 행복시대; [비핵, 개방, 3000]과 북의 핵실험, 김정은 체제 출범

- 2010년의 G-20 개최, 북의 연평도포격, 서해 미 항모 진입,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 2. 브레진스키의 꿈

-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베트남전쟁,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워터게이트의 악몽
- 3자 상호협력(Trilateralism(미국-유럽-일본)); 데탕트; China Card
- “Balancing the East, Upgrading the West: U.S. Grand Strategy in an Age of Upheaval” (Foreign Affairs, 1-2/2012)
- 미국은 서양의 확장(유럽에서는 러시아 포섭,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까지 포함하는)과 단합을 촉진하고, 동양의 안정자, 세력균형자 역할을 병행해야
- 미-중-일의 협력체제: 미국은 인도의 반중, 일본의 반중 군사동맹/협력을 피해야
- 대중국 단, 중, 장기 과제: 1) 중국의 영해 주변에서 정찰활동, 군사훈련 자제; 2) 군사훈련 상호참관, 상호이해; 3)대만의 지위 (결국은 흡수될 것)
- 연루의 방지: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in Asia should be to uphold U.S. obligations to Japan and South Korea while not allowing itself to be drawn into a war between Asian powers on the mainland.”(102)

## 3. 빅터 차의 고민: 한국이 문제다!

- Korean American scholar - Hawk Engagement; 부시 정부 NSC Director for Asian Affairs (2004-07); 그의 후임(Katrine Katz, 07-08)과의 공동 논문: “South Korea in 2011: Holding Ground as the Region’s Linchpin” (Asian Survey, 1-2, 2012)
- “Finally, South Korea must avoid the temptation to act unilaterally. This is hard for Koreans to hear. After all, this is their peninsula, and while political flux in North Korea is a foreign policy issue for China and the U.S., it is about life and death for Koreans. **But in every unclassified scenario game we have played on exactly this contingency, the trigger for major-power conflict in Korea has been unilateral South Korean actions that spark an action reaction spiral between the U.S. and China. This must be avoided at all costs**”(63).<sup>19</sup>



# 북한의 자주-의존의 딜레마와 헤징전략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I. 서론

## II.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

## III. 북한의 대중국 헤징(hedging)전략

## IV. 결론: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북한 자주-의존 딜레마와 헤징전략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I. 서론

최근 북한과 중국의 협력관계가 심화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종속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sup>35)</sup>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나<sup>36)</sup> 중국의 동북공정과 연계하여 중국의 북한 및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의도를 지적하기도 한다.<sup>37)</sup>

35) 김영윤,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한국의 과제,” 「정책과학연구」 제20집 (2)호 (2011); 배종렬,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특징과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10년 겨울호); 오승렬, “북중경제관계의 구조와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소고,”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1)호 (2010); 유승경,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 깊어지고 있다,” 「LGERI 리포트」 (2010.9.29.); 이종석, “북-중경제협력의 심화: 특징과 함의,” 「정세와 정책」 (2011년 7월호);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등 참조.

36) 남성욱,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統一問題研究」 통권 제45호 (2006년 상반기호).

37) 이용희, “북한 경제의 중국 예측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국제통상연구」 제14권 (1)호 (2009); 원동욱, “동북공정의 내재화, 중국 동북지역 인프라개발의 전략적 함의,” 「國際政治論叢」 제49집 (1)호 (2009).

그렇다면 과연 북한은 글로벌 파워로 도약하면서 지역 내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대해가고 있는 중국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들어가고만 있는 것인가? 현실주의적인 국제관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sup>38)</sup>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와 경제협력 심화가 야기할 정치적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특히 지난 역사에서 중국의 대국주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던 기억을 갖고 있고 탈냉전 초기 국제적 고립을 ‘강요당하였던’ 아픈 경험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대미관계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그나마 일본과의 관계도 사실상 완전히 단절된 데다<sup>39)</sup> 남한마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의존도 심화를 감수하면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으나 그 이면에서 끊임없이 의존도 분산 또는 완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자주와 의존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핵심적인 질문은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그로 인한 자율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이다.<sup>40)</sup> 2장은 이를 위한 논의의 기초로 북한과 중국 관계의 성격과 북한의 대중국 인식을 살펴본다. 3장은 협력 강화와 그에 따른 위험성들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북한의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정치·외교, 군사, 경제 분야에 걸쳐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중국 정책이 던지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검토된다. 이 글은 시기적으로 탈냉전기를 다룬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북한도 권력교체기에 들어간 2009년 이후를 특히 주목한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만들어진 틀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시대에도 지속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8) 우승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한울, 2009); 최종건, “북한의 세계관에 나타난 국제정치이미지 분석-이미지 이론을 중심으로,” 이수훈 편,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질서』 (서울: 한울, 2011) 참조.

39) 나미나, “일본의 대북외교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1월호) 참조.

40)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많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중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한과 중국 양자관계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양국 관계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허문영·마민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11)’과 ‘김예경,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대응전략: 편승전략과 동맹, 유화 그리고 현안별 지지정책.” 『國際政治論叢』 제47집 2호, (2007); Kim, Sung Chull,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China: From Alignment to Active Independence,” in Lam Peng Er and N. Ganesan, Colin Dürkop (eds.), *East Asia’s Relations with a Rising China* (Seoul: Konrad Adenauer Stiftung, 2010)’ 등이 있다. 허문영·마민호는 갈등적 편승이라는 틀에서 북한의 대중전략을 분석하고 김예경은 방어적 편승 개념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중국 대응을 분석하고 김성철은 북한이 중국을 혈맹이 아니라 배신자로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입장도 지지(alignment)에서 자주(independence)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의 대중국 정책에서 균형(balancing)의 요소가 있음을 주목하지는 않고 있다.

## II.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

### 1. 북·중관계 성격: 전략적비대칭적 협력과 갈등

북한과 중국은 공식적으로 동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11일 군사동맹조약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냉전기와 동서대타트 그리고 탈냉전기를 거치면서도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이 조약을 수정 또는 폐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동맹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은 특정한 사안, 특히 안보 현안에 대한 설명에서는 일정하게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움 또한 지니고 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안보 분야뿐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형성되고 이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충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동맹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탈냉전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전통적인 혈맹관계가 형해화되면서<sup>41)</sup> 전략적 이해관계의 공유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점차 변하고 있다.<sup>42)</sup>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41) 이상숙, “북중우호조약의 현대적 함의와 양국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2011년 가을호); 朱鋒, “中朝关系中的同盟因素: 变化与调整,” 『중북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과 한미동맹』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2011.9.1.). 주평은 북중 간의 동맹에 어울리는 군사협력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맹 관계가 공동화되었으며 중국이 예측 가능한 장래에 동맹국으로의 책임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42)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Andrew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The Limits of Influence,” *Current History* (September, 2003); International Crisis Group,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Asia Report No. 112 (1 February 2006); 박창희, “지정학적 이익 변화와 북중동맹관계: 기원, 발전, 그리고 전망,” 『중소연구』 통권 제113호 (2007, 봄); 이태환, “북중관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대외관계』 (서울: 한울, 2007);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 (2 November, 2009); 장공자, “북한의 대중협상전략과 우리의 대응전략,” 『통일전략』 제9권 (2호) (2009); 최명해, “북한의 대중 의존과 중국의 대북영향력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 여름호); 김강일, “북·중관계 현황과 변화전망,”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외식” 학술회의 발표문 (2010년 10월); Kim, Sung Chull,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China: From Alignment to Active Independence,” in Lam Peng Er and N. Ganesan, Colin Dürkop (eds.), *Facing a Rising China in East Asia* (Seoul: Konrad Adenauer Stiftung, 2010); 서보혁, “북중러 3국의 협력 실태에 관한 세 가지 질문,” 『통일과 평화』 제3집 (2)호 (2011);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JPI 정책포럼 No. 2011-15, (2011);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김홍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역할,” 제122회 홍사단 금요통일포럼 발표문 (2012.3.23.), <http://uni.yka.or.kr/yka/board.php?board=pdsforum&command=body&no=57> (검색일: 2012.4.2.).

2000년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을 면담하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개방하면서 두 나라와 북조선(북한)의 군사동맹이 소멸된 지 10년이 지났다”고 언급하였다.<sup>43)</sup>

탈냉전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주목할 것은 이념적 동질성이나 정서적 유대가 사실상 사라진 데다 전략적 이해관계와 포괄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중국은 1978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해왔고, 정치적으로도 공산당 지배체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전체주의적 특성보다는 권위주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sup>44)</sup> 반면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최고영도자의 유일적 지배체제를 추구하면서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항일 무장투쟁기나 한국전쟁 시기에 맺어진 인적 유대도 사실상 끊어졌다.<sup>45)</sup>

그러나 북한과 중국 관계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이다.<sup>46)</sup>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지역질서 주도자로 부상하고, 아직까지 지구적 차원에서 공공재를 공급할 수준은 아니지만 국제 경제 질서 유지 및 변화나 주요한 안보 현안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안정은 중요한 정책 목표일 수 있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은 안정적 상황 관리와 변화 촉진이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자국에 대한 개혁개방 요구와 영향력 확대 그리고 핵개발 포기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압력으로 나타난다. 반면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가 정권과 체제의 안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 핵개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핵개발도 정치적 자주의 상징이자 주변 강대국에 대한 레버리지로서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북한과 중국이 혈맹에서 탈피하여 전략적인 협력과 갈등관계로 전환되는 또 다른 핵심요인은 양국의 포괄적 안보위협 평가가 상이하다는 점이다.<sup>47)</sup> 냉전시대에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에 대한 평가에서 입장을 달리하였다. 중국은 1960년대 소련과 노선 및 국경 분쟁 등을 거치면서 소련을 주적으로 삼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연미제소(聯美制蘇) 전략이 그것이다.<sup>48)</sup> 반면 북한은 구소련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분쟁의 틈새

43) 매들린 올브라이트, 백영미 외 역, 『마담 설키리터리(Madam Secretary)』 (서울: 황금가지, 2003), p. 367.

44) 정재호 (2011), p. 339.

45) 이종석 (2000), p. 290; 정재호 (2011), p. 338; 현성일 (2007), p. 343-344.

46) 최명해 (2010), pp. 81-85.

47) 최명해 (2010), pp. 851-86; 김동성,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pp. 124-125.

에서 구소련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경제적 실리도 적극 도모하였다.<sup>49)</sup> 1970년대 이후 북한과 중국은 미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에서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sup>50)</sup> 1960년대 말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시작된 미중 간에는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1979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냉전기에 들어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라 중국과 미국은 전략적 공존의 틀 안에서 갈등하면서도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였고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또한 남한에 대한 평가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1992년 남한과의 관계정상화 이후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시켰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남한과의 군사적 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남한에 의한 북한 체제붕괴 유도와 흡수통일 가능성마저 우려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동맹 틀에서 벗어나 외연의 확장성과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포용성을 지닌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개념이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더 적절할 수 있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고전적인 균형과 편승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용되는 관여와 저항(engage and resist) 또는 헤징전략(hedging strategies)들을 보여준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타 국가와의 공식적인 군사동맹 체결은 제약하지만 다양한 강대국들과 유사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sup>51)</sup>

한편 북한과 중국은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asymmetric interdependence)의 특성도 보이고 있다.<sup>52)</sup> 비대칭적 상호의존과 관련하여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이 영토나 인구,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 경성국력의 크기와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체계 내에서 국가의 행위는 국가 간의 힘의 관계와 그 차이에 의해 결정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영향력이다.<sup>53)</sup> 약소국은 강대국 간에 협력보다 갈등이 고조될 때 협력대가를 극대화하면서 협

48)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pp. 276.

49) 이종석 (2000), pp. 237-245.

50)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pp. 292-302.

51) Vidya Nadkarni, *Strategic Partnerships in Asia: Balancing without Alliances* (New York, N.Y.: Routledge, 2010), p. 45.

52) Samuel S. Kim and Tai Hwan Lee,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이상숙,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불안정한 북한과 부강한 중국의 비대칭적 협력 강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4호, (2010, 겨울); 최명해 (2010), p. 76.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에 대해서는 Brantly Womack, “Asymmetry Theory and China’s Concept of Multipolarit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3-39 (May 2004); Brantly Womack, *China among unequals: asymmetric foreign relationship in Asia* (Singapore; Hackensack, N.J.: World Scientific, 2010) 참조.

53) Michael Hendel, *Weak Stat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ass, 1981), p. 10.

상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 경쟁하는 강대국과 인접해 있거나 국제적 거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을 경우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입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인종적 단일성이나 기본적 가치와 관련된 정치엘리트들의 통일성, 주민들의 의지 결집능력, 강대국의 다자적 관계와 다양한 대응현안에 비해 양자적 관계 중심의 적은 대응현안에 대한 역량 집중, 고도로 집중되고 안정적인 정권의 의사결정 체계 등을 기초로 강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재고할 수 있는 것이다. 약소국은 또한 강대국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취약함을 무기로 강대국을 협박할 수도 있다.<sup>54)</sup>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들이 존재한다. 북한은 자신이 지닌 지정학적 이점과<sup>55)</sup> 중소 또는 미중 간의 갈등,<sup>56)</sup> 정치적 통일성과 주민결속, 취약함을 무기로 삼은 협박 등을 기반으로 자주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강대국인 중국의 반대와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 이는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sup>57)</sup>

## 2. 북한의 대중국 인식: 세력균형 변화와 경계

북한은 현실주의적 국제관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국제관계 담론에서 국가와 민족을 국제관계 주요 단위로 강조하고 이분법적 사고 하에서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결을 주목하며, 군사력을 중시한다.<sup>58)</sup>

북한은 이러한 현실주의적 국제관에 입각해 지역 차원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부상에

54) Ulf Lindell and Stefan Persson, "The Paradox of Weak State Power: A Research and Literature Overview," *Cooperation and Conflict* 21-79 (1986), pp. 81-91.

55) 우승지 (2009), p. 126.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세력의 전쟁정책을 막는 역지력이 핵개발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56)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에 대한 경계심을 양국 간 갈등 가능성에 대한 강조로 표현한다. 조택범, "전략적 리해관계를 둘러싸고 심화되는 모순," 『로동신문』 (2011.1.13.); 리학남, "대립되는 리해관계, 마찰의 불씨," 『로동신문』 (2011.5.23.); "공연한 생트집, 미국의 《중국군사위협론》," 『조선중앙통신』 (2011.9.7.); 리영, "무기판매를 둘러싸고 격화되는 중미갈등," 『로동신문』 (2011.10.3.); 리학남 "풀릴 수 없는 대립관계," 『로동신문』 (2011.11.7.) 등 참조. 2011년 1월 13일 기사는 후진타오 주석의 1월 18일 방미를 앞두고 나왔으며 2011년 5월 13일 기사는 5월 9~10일간 열린 미중 간 경제전략대화 직후에 나왔다.

57) 중국의 대북영향력에 대해서는 이상숙,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불안정한 북한과 부강한 중국의 비대칭적협력 강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4)호 (2010, 겨울); 최명해 (2010); Andrew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The Limits of Influence," *Current History* (September, 2003) 참조.

58) 우승지 (2009), pp. 107-113.

다른 세력균형 변화를 주목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균형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이 국제무대에서의 세력균형 파괴를 기화로 세계적 지배권 확보를 도모한다고 주장하거나<sup>59)</sup> 중국과 인도의 부상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와 군사력 균형의 변화를 주목하고<sup>60)</sup> 세계적 군비경쟁 종식과 평화 및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에 의한) 전략적 균형 파괴가 중단되어야 한다거나<sup>61)</sup>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방대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움직임은 지역 내 힘의 균형을 파괴하여 전쟁 위험성을 높인다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sup>62)</sup> 자주와 균형을 강조하는 북한은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만들어지고 있으며,<sup>63)</sup> 이미 지역 내에서는 세력균형이 변화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중국 등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이자 적수라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미국의 잠재적인 경쟁적수로 되고 있는 대국들이 집중되어 있다’며 중국 등의 부상을 주목하는 동시에 ‘미국은 조선반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이곳을 틀어쥐지 않고서는 아시아대륙을 지배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군사적 포위환을 형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sup>64)</sup> 특히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면서 전략적 요충지론을 내세운다. 즉 탁월한 영도자인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조선’이 큰 나라들 간 각축전의 무대라는 지정학적 속명론을 부정하고 ‘조선’이 불리한 위치가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라고 결론 내렸으며,

59)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조선중앙통신」 (2011.1.28.)

60) “새 세기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 군사력 균형에서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 인디아 등 여러 나라들이 신흥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다”(“미국의 새 군사전략보고서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조선중앙통신」 (2011.3.2.)); “현시기 국제정치의 중심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쇠퇴, 일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의 국력강화 등은 냉전종식 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힘의 균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군사적 패권 유지를 노린 무모한 망동,” 「로동신문」 (2011.12.7.)). 이와 관련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로동신문의 사설 등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지 않으면서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 상승과 세계의 다극화를 주목하는 인식을 표출해왔다(김예경 (2007), p. 80)).

61) “전략무력분야에서 심화되는 로미대립,” 「조선중앙통신」 (2011.10.28.).

62) “전략적 3각 군사동맹 형성을 노린 망동,” 「조선중앙통신」 (2011.11.17.).

63) 김예경 (2007), p. 80.

64) 조택범, “아시아태평양 《중점외교》에 비친 흥계,” 「로동신문」 (2011.12.2.); 리현도, “동북아시아에서 팽진구도는 제거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2011.3.10.).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관계는 순망치한(唇亡齒寒)과 같을 수 있다. 중국 내에 북한이 존재하지 않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1,400여km에 달하는 방어선을 상실한 셈이 되고 요동반도와 발해만의 출구가 봉쇄되며, 수도를 옮기지 않으려면 10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방어선을 새롭게 구축해야 했다는 인식도 있다(어우양산 저, 박종철·정은이 공역, 『중국의 대북조선 기밀파일』 (서울: 한울, 2008), pp. 46-47).

최근 년에 ‘적대국들에 맞서 연전연승한’ 바탕에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 사상’이 있다고 선전한다.<sup>65)</sup> 이는 물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배짱과 영도실력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한의 ‘큰 나라’에 대한 경계심과 지정학적 가치 및 위상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은 양자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경제성장 등을 언급하는 데서 확인된다.<sup>66)</sup> 김정일 위원장은 또한 북중 양국이 많은 측면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라는 지역적 틀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sup>67)</sup>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감추지 않는다. 북한이 중국을 불신하는 것은 김일성 전 주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일성 전 주석은 간부들과의 비공개 협의에서 “중국 사람들을 너무 믿다가는 자칫 등 뒤에서 칼을 맞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sup>68)</sup> 김정일 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일 위원장으로서서는 북중 관계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인식들에 더해 자신의 권력 ‘세습’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sup>69)</sup> 중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전체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동북아 안정을 위한 균형자로 용인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다.<sup>70)</sup> 김정일 위원장은 또한 2009년 방북하였던 현정은 현대그룹 부회자에게도 자신은 ‘중국을 믿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sup>71)</sup> 김정일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들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sup>72)</sup>

65) 김지영, “일심단결의 중심에서 최고사령관의 령도력-3,” 「조선신보」 (2012.3.17.).

66)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역을 비공식방문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0.5.7.);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0.5.8.);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0.8.30.);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1.5.26.);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1.5.26.).

67) 리기성, “라선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의 기본 거점,” 제10차 코리아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2011.8.24.-25); 송현철, “동북아시아 지역 내 경제협력의 강화와 조선반도중단철도,” Tumen River Academic Forum 2011 발표 논문집 (2011.8.21.-22).

68) 현성일 (2007), p. 165.

69) You Ji,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s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28 (2001), p. 389; 어우양산 (2008), p. 64).

70)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서울: 중앙북스, 2008), pp. 115-116. 사실 북한은 탈냉전기에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다.(현성일 (2007), pp. 340-341).

71) Tokola, “HYUNDAI CHAIRWOMAN ON DPRK TRIP, KIM JONG-IL,” U.S. Embassy Seoul Cable (Reference ID: 09SEOUL1386, 2009.8.28.), <http://wikileaks.org/cable/2009/08/09SEOUL1386.html> (검색일: 2012.3.30.).

72) 한편 중국도 자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북한지도부는 중국 지도부가 자신들보다 서방세계 특히 남한과 더 많이 대화하고,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가 미국이나 남한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 시대에 들어 권력교체기라는 특성과도 연관되어 중국에 대한 경계와 자주성 강조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최대 유산으로 핵과 인공위성을 들면서 이를 대국들 틈에서 자주성을 고수할 수 있게 해준 업적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압력이 클수록 자기의 주견을 더욱 확고히 내세워야 하며 자신이 결정한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한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을 재확인하며<sup>73)</sup> 지배주의자(중국)에 맞선 자주성 견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한 연설에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가졌으며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지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며 인민군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유지할 것과 ‘총대’로서 강성국가건설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였다.<sup>74)</sup>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화보다 자주를 강조하면서 자주를 달성하기 위한 총대를 언급한 것은 “선군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sup>75)</sup>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이 또한 주변 대국인 중국에 대한 경계와 자주성 견지의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III. 북한의 대중국 헤징(hedging)전략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부상 자체를 좌절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부상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부상 과정과 결과에 관여하고 적응하는 것이다.<sup>76)</sup>

---

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협조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본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 p. 16).

73) 김준혁, “자주정신의 강자로 된 인민,” 「로동신문」, 2012년 4월 7일.

74)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5일.

75)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201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76) 전재성,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국방연구』 제51권 3호, (2008), pp. 6-18.

이러한 세 가지 대응 방안 가운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이다. 이는 북한과 중국 간의 국력차이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북한으로서는 부상하는 중국에 적응하고 관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헤징전략으로 볼 수 있다. 헤징전략은 대상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한 의도, 즉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험과 같은 전략이다.<sup>77)</sup> 헤징전략은 안보나 경제, 정치적인 영역에서 높은 불확실성과 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간접 균형(indirect balancing), 지배 거부, 경제적 실용주의, 결속적 관여(binding engagement), 제한적 편승(limited bandwagoning)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형적인 균형(balancing)이나 편승(bandwagoning)을 제외한 다양한 정책들이 헤징전략에 포함될 수 있다.<sup>78)</sup>

북한이 중국에 대해 헤징전략을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주성의 견지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거 중국의 대국주의적 간섭과 ‘배신’의 기억을 갖고 있고 동서 테탕트와 탈냉전기에 전략적 이해관계와 포괄적 안보위협 평가가 달라진 상황에서 부상하는 중국이 제공하는 기회 못지않게 그로 인한 대중국 종속 또는 의존심화가 북한 체제와 정권에 야기할 정치적 위협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하는<sup>79)</sup>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대중국전략의 출발점은 중국이 지닌 경제력과 외교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중국의 내정간섭과 정치적 영향력을 철저히 견제하는 것이며,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해 ‘중국의 대한반도 이해관계를 역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80)</sup>

77) Evelyn Goh, “Understanding Hedging in Asia-pacific security,” *PacNet* 43 (31 August, 2006); Brock Tessman and Wojtek Wolfe, “Great Powers and Strategic Hedging: The case of Chinese Energy Security Strateg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3 (2011), p. 216.

78) Kuik Cheng-Chwee, “The Essence of Hedging: Malaysia and Singapore’s Response to a Rising Chin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30-2 (2008), pp. 163-172. 이외에 헤징전략의 틀로 유럽연합의 안보전략이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등을 분석한 글로 Robert A. Manning and James J. Przystup, “Asia’s transition Diplomacy: Hedging Against Future shock.” *Survival* 41-3 (Autumn 1999); Eric Heginbotham and Richard J. Sammuels, “Japan’s Dual Hedge.” *Foreign Affairs* 81-5 (September/October 2002); Chung Chien-Peng, “Southeast Asia-China Relations: Dialectics of Hedging and Counter-Hedging,” *Southeast Asian Affairs* (2004); Denny Roy, “Southeast Asia and China: balancing or Bandwagoning?”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7-2 (2005); Stephen G. Brooks and William C. Wohlforth, “Hard Times for Soft Balancing.” *International Security* 30-1 (Summer 2005); Evans S. Medeiros, “Strategic Hedging and the Future of Asia-Pacific Stability,” *The Washington Quarterly* 29-1 (winter 2005-2006); Asle Toje, “The EU Strategy Revised: European Hedging in Its Bets.”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5 (2010) 참조.

79)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 데 대한 결정서,” 「조선신보」 (2012.4.12.).

80) 현성일 (2007), p. 346.

## 1. 정치·외교적 대응: 자주와 연성균형

### (1) 정치적 대응: 자주

먼저 정치적인 영역에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그 구체적 비전인 강성대국 건설론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군정치에서 확인된다. 이는 자주성 고수를 위한 국가전략이지만 자주성 견지는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이라는 점에서 인접한 ‘대국’이자 ‘지배주의자’이기도 한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론은 중국의 변화와 동유럽의 사회주의권 붕괴 등 대외적 위기가 체제나 정권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를 천명한 위기대응 담론으로 1980년대 말 등장하였고 1991년 김정일에 의해 정식화되었으며<sup>81)</sup> 김정은 시대에도 유효으로 계승되고 있다.<sup>82)</sup> 그리고 이는 중국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을 추진한 중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 개혁개방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83)</sup>

강성대국은 우리식 사회주의가 현실 속에 구체화된 국가비전이자 전략일 수 있다. 강성대국은 국가발전 목표와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는 북한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sup>84)</sup>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등장하여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1995~97년까지 고난의 행군을 마치면서 1998년 국가비전으로 강성대국론을 제시하였다.<sup>85)</sup> 특히 북한은 2007년 11월 30일~12월 1일 개최된 지식인대회에서 김일성 전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고조’를 강조하였다. 북한은 강성대국론이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가장 웅대한 국가건설목표’로서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도 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이를 정치와 사상, 군사, 경제, 과학문화강국으로 대별하고 사상중시와 총대중시에 더해 과학기

81)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년 5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 선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82)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로동신문』 (2011.12.27.).

83) 허문영·마민호 (2011), pp. 25-29, 59-60; 어우양산 (2008), pp. 63-64.

84) 정우근, “김정일 정권의 국가발전전략: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4)호 (2004), p. 37.

85) “김정일 총비서의 숭고한 애국애족리념,” 『로동신문』 (1998.7.12.); “조선혁명을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로동신문』 (1998.8.11.); “청년들은 당의 위업에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로동신문』 (1998.8.28.); “김일성주석의 건국업적을 빛내이시는 걸출한 령도자,” 『로동신문』 (1998.8.28.); “승리자의 50년,” 『로동신문』 (1998.9.1.);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1999.1.1.). 등 참조. 이 당시 북한은 ‘주체의 강성대국’이나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상의 강국과 군사의 강국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선전하였다.

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강조한다.<sup>86)</sup>

북한의 국력이 대국에 미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주변의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며 정권과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을 결집시키려는 선전적 의미가 강한 수사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주변의 대국이 자신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와 대응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선군정치는<sup>87)</sup> 강성대국을 이룩할 수 있는 정치방식이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강력한 국력을 마련하여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전변시키는 정치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면에는 대국의 지위가 군사력에 의해 좌우되며 아무리 방대한 경제력과 과학기술을 갖고 있어도 군사력이 약하면 외세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인식이 놓여있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군사적, 정치사상적, 경제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여 군사강국, 사상강국, 정치강국, 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하며 ‘강성대국 건설의 확고한 담보’가 된다고 주장한다.<sup>88)</sup>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북한)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북한)가 대국들과 어깨를 견주고 국제문제를 론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시하는 나라로 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89)</sup> 이는 선군정치가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대국인 중국과도 어깨를 견주며 중국이 자신을 중시하게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2000년 5월, 2001년 1월, 2004년 4월, 2006년 1월)이 선군정치에 기초한 북한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을 온 세계에 힘 있게 시위한 역사적인 방문’이었다고 평가한다.<sup>90)</sup>

북한이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내세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인 우리식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낮추어진 강성대국 건설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인 선군정치는 2012년 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노동당규약에도 명시되었으며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 급서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 시대에 들어서도 계승되고 달성되어야 할 유훈으로 강조되고 있다.<sup>91)</sup>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 시대에도 미국 등 소위 제국주의

8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p. 327-382.

87) 북한 문헌에서 선군정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12월이며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9년부터이다. 선군정치의 등장과정에 대해서는 ‘진회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대한 연구,” 『國際政治論叢』 제48집 (1)호 (2008)’ 참조.

8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2006), pp. 191-197, 462.

89) 위의 책, p. 417.

90) 위의 책, p. 423.

91)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로동신문」 (2011.12.2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조선중앙통신」 (2011.12.31.);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

세력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대국’에 대한 북한의 자주성 견지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 (2) 외교적 대응: 연성균형

외교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그를 활용하기 위한 제한적 편승 (limited bandwagoning)<sup>92)</sup> 하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시키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연성균형(soft balancing)<sup>93)</sup> 일환으로 미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나 협력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한중수교로 급속히 냉각되었던 중국과의 관계를 1990년대 말부터 회복한 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09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대북정책이 적극적인 포용으로 변화된 점을<sup>94)</sup>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와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 2010년 5월과 8월, 2011년 5월 등 1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그를 통한 양국 지도부 간 대화, 군사나公安부문의 협력 강화, 중앙 관료뿐 아니라 지방의 당·정 간부들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교류 등은 이러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2010년 5월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양국은 내정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sup>95)</sup>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 간의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도 하였다.<sup>96)</sup>

---

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사설 (2012.1.1.) 등 참조.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 동향에 대해서는 변상정,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추진 동향과 전망,” 『군사논단』 제67호 (2011년 가을) 참조.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급서 이후에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선군정치를 지속하고 자력갱생과 첨단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경제특구 개발도 모색하고 있다.

92) 약소국은 위협을 회피하거나 이익(profit)을 얻기 위해 강대국에 편승한다. 이때 제한적 편승은 정치적·군사적 지지(alignment), 한 강대국에 편승하기 위해 다른 강대국과 거리를 두는 영합(zero-sum) 시나리오, 후진국과 약소국 간의 지배-종속 관계 수용을 수반하는 순수한 편승과 달리, 선택적인 이슈 조정과 큰 상대에 대한 자발적 존중(deference)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파트너십, 비영합 시나리오, 약소국의 자율성 상실이나 과도한 의존 회피를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순수한 편승은 위계질서를 수용하는 것이지만 제한적 편승은 위계질서를 회피하는 것이다(Kuik Cheng-Chwee (2008), pp. 168-169).

93) 연성균형 정책은 제3자에 대한 군사적인 동맹 대신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약소국들은 강대국 간의 경쟁관계를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연성균형 정책을 채택한다(Lam Peng Er, Narayanan Ganesan, and Colin Dürkop, “Introduction: China and East Asia’s Mutual Accommodation.” in Lam Peng Er and N. Ganesan, Colin Dürkop (eds.), *Facing a Rising China in East Asia* (Seoul: Konrad Adenauer Stiftung, 2010), p. 16).

94) 이용인·김태형, “북, 중국에 안보·경제 더 의존…중, 6자 재개 적극 나설 것,” 「한겨레신문」 (2010.5.11.). 이 기사 중 이회옥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7월 후진타오 주석이 조장인 당중앙외사영도소조를 열어 북한문제가 (중국의) 안정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북한문제를 북핵문제를 분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양국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나<sup>97)</sup> 인권문제,<sup>98)</sup> 대만과 영토문제<sup>99)</sup>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다.

한편 북한은 탈냉전기에 전방위적인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도<sup>100)</sup> 대미관계 개선 또는 정상화를 가장 중요한 외교 목표로 삼고 있다.<sup>101)</sup> 이를 중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시키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연성균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냉전기에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취함으로써 자주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실리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른바 중소와의 등거리 외교가 그것이다. 탈냉전기에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한 양극적 질서가 형성되면서 이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등거리-균형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02)</sup>

95) 당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두 나라 고위급의 래왕과 협조를 부단히 심화시켜나갈 용의를 표명’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2010.5.8.))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 주요한 내정과 외교 문제(major domestic and diplomatic issues)를 포함한 전략적 조정 강화를 비롯해 고위급 접촉 유지, 경제와 무역협력 심화, 인적교류 증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문제에 대한 조정 강화 등 5가지를 제외하고 김정일 위원장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발표하였다(“Top leaders of China, DPRK hold talks in Beijing,” 『Xinhua』(May 7, 2010)). 그러나 북한이 중국과 내정까지 포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안정적인 권력승계 등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의 대중국 인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실제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96)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중국공산당대표단 전략대화,” 『노동신문』(2011.6.11.). 당시 양당 간의 전략대화에는 지방당 관계자들도 참석하였는데 북한측에서 평양시당 부장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길림성과 상해시, 강소성의 당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는 북중 간의 협력이 중앙뿐 아니라 지방차원으로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012년 들어서도 북한은 4월 중순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의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마무리하고 4월 21일 북경에서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97) 북한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망 구축 움직임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조택범, “전략적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동신문』(2012.3.27.); 박송영, “미사일방위체계문제를 둘러싼 대립,” 『노동신문』(2012.2.22.); “미국과 나토의 미사일방위체계전개책동에 강력히 대응,” 『노동신문』(2011.12.9.); 김현철, “침예한 대립을 낳는 제주해군기지건설,” 『노동신문』(2012.3.21.) 등 참조.

98) 서남일, “파렴치한 《인권재판관》에 대한 항의규탄,” 『노동신문』(2011.4.30.).

99) “미국의 《두개 중국》 개념을 배격,” 『노동신문』(2011.5.28.); 배금희, “일본은 왜 령토분쟁에 매달리는가,” 『노동신문』(2011.7.16.); 진철, “명유권문제를 둘러싼 중일마찰,” 『노동신문』(2012.2.20.). 북한은 조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과 관련, 일본이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저들의 리기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일본을 비판한다.

100)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머랑에 선 줄타기외교의 선택』(서울: 백산서당, 2002), pp. 142-152.

101) 탈냉전기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장달중 외, 『북미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11), pp. 168-187.’ 참조.

102) 이상숙, “북미관계 개선 이후 북한의 대중정책: 미중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4권 1호, (2008). 이상숙은 등거리 외교를 위해서는 대립적인 두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경우 북한이 이들을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앞에서도 살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주한미군을 지역안정을 위한 균형자로 인식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다.<sup>103)</sup>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하면서 미국과의 우선적인 대화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경우는 미국을 방문하였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나 이용호 부상의 말 속에서도 확인된다. 김계관 제1부상은 2007년 3월 뉴욕을 방문하면서 “중국은 우리(북한)를 이용만 하려 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없다. 미국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며<sup>104)</sup>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강하게 표출하였다. 이용호 부상도 2012년 3월 뉴욕을 방문하면서 “미국이 우리와 동맹을 맺고 핵우산을 제공하면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표명하였다.<sup>105)</sup> 이는 북한으로서는 언제나 미국과 손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sup>106)</sup>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연성균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의 언급뿐 아니라 실제 북한은 핵심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협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정상선언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 북한의 요구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 추진이 적시된 것도 ‘3자’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비핵화 논의 과정은 중국을 중재자로 활용하지만 결국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핵심적인 문제들을 풀어감으로써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북한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이는 2011년 7월과 10월, 2012년 2월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비핵화사전조치에 먼저 합의하고 북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협의한 다음 6자회담 재개로 나가려는 북한의 전략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러시아도 북한의 대중국 연성균형 정책의 주요한 대상이다. 이는 과거 중소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실리를 극대화했던 양태의 연장선에서 북한 외교의 일반적 특징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2010년부터 1년 사이에 중국을 세 차례나 방문한 뒤 2011년 8월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방문하여 남북러 가스관연결 사업 등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문제를

---

펴보았지만(각주 23 참조), 북한이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이기보다는 갈등과 마찰을 겪을 것이라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03) 각주 37 참조.

104) 박승준·김기훈, “北 김계관 “美는 中에 기대 말라.” 「조선일보」 (2007.3.9.).

105) 이우탁, “北리용호 ‘화려한 발언’…美신중행보,” 「연합뉴스」 (2012.3.13.).

106) 현성일 (2007), p. 340.

협약하였고 특히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물질 생산과 핵실험 중단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sup>107)</sup> 동북아의 핵심적인 안보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중재자적 입지를 재고시켜주었다. 이는 러시아를 적절히 활용하여 중국이나 미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중국의 동진정책을 러시아의 남진정책으로 견제’하는<sup>108)</sup> 효과가 있는 것이다.

## 2. 군사적 대응: 자위와 내적 균형

군사적인 차원에서 북한은 자위적 군사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을<sup>109)</sup> 도모하고 있다. 북한의 자주성 견지는 군사부문에 가장 강하게 투영되고 있다. ‘군력(軍力)’을 핵심요소로 삼아 전반적인 국력을 강화함으로써 강성대국을 달성하겠다는 선군정치 논리나 강성대국의 핵심지표인 군사강국 추구가 이를 보여준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미일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자구노력일 수 있으나, 주변 대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한 ‘내적 균형’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국방에서의 자위를 철저하게 견지해왔다. 북한은 1963년 이래 전군의 간부화와 현대화, 전민 무장화와 전국 요새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고 이는 선군정치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국방공업에 대한 우선적인 자원배분도 선군정치 시대의 경제노선으로 천명하고 있다. 2002년부터 천명된 국방공업 우선과 농업·경공업 동시발전 노선이<sup>110)</sup> 그것이다.

북한의 자위적 국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직후인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1963년 소련으로부터 실험용 원자로인 IRT-2000을 도입하고 1986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변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하는 등 반세기 이상 꾸준히 핵개발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고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였다.<sup>111)</sup> 북한은 특히 2009년부터 기존의 플루토늄프로그램을 사실상 폐기하고 우라늄농

107) 유철중, “러-북 정상, 울란우데서 어떤 합의했나,” 『연합뉴스』 (2011.8.24.).

108) 홍현익,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과 북·러의 전략,” 『세종논평』 (2011.8.22.), p. 1.

109) 내적 균형은 동맹형성과 같은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의 불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비 지출 증대나 징병제 시행과 같이 자신의 추가적인 자원을 동원하여 상대방에 대한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으로 ‘자위(self-help)’를 의미한다(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2001), p. 157).

110)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187.

축프로그래밍에 기반한 핵개발로 옮겨갔다. 북한은 2010년 11월 미국의 핵전문가들에게 원심분리기 2,000기 규모의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하였고 25~30MWe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도 자체적으로 건설하고 있다.<sup>112)</sup>

〈표 1〉 북한의 1·2차 핵실험 비교

구분	1차 (2006.10.9)	2차 (2009.5.25)
위력	지진규모 3.9, 1kt 이하	지진규모 4.5, 2~4kt
결과	핵폭발 성공, 폭발위력 제한	핵폭발력 증대
의미	핵무기 제조 능력 확인	핵보유 기정사실화

\* 출처: 함형필 (2012), p. 1.

북한은 동시에 1998년 8월, 2006년 7월, 2009년 4월에 이어 2011년 4월에 장거리 미사일 또는 위성운반 로켓을 발사하여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완료해 가고 있다.

〈표 2〉 북한의 미사일 제원

구분	SCUD-B	SCUD-C	노동	무수단(IRBM)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사거리(km)	300	500	1,300	3,000 이상	2,500	6,700 이상
탄두중량(kg)	1,000	770	700	650	500	650~1,000(추정)
비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개발 중

\*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2010』 (서울: 국방부, 2010), p. 282.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중국의 분명한 반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횡포하게(悍然)’ 핵실험을 했으며 북한을 비난하였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채택에 협조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 핵실험 시에도 이전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보다 제재가 훨씬 더 강화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채택

111) 함형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반도비핵화 전망,” 제26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정책포럼 발표문 (2012.3.13.), p. 1.

112) Siegfried S.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November 20, 2010). <http://iis-db.stanford.edu/pubs/23035/HeckerYongbyon.pdf> (검색일: 2011.11.5.).

에 협조하였다. 2012년 4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서도 중국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발사에 대한 유엔차원의 대북제재 강화에 협조하였을 뿐 아니라<sup>113)</sup>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기도 하였다.<sup>114)</sup>

북한이 이렇게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이유로는 핵으로 무장한 적의 공격 억제, 재래식 군비의 비대칭성 극복, 군사적 우위 추구, 지구적 또는 지역적 강국으로 부상, 국제적 지위 강화, 외톨이 국가의 생존능력 과시, 정치적·군사적 독립 자산, 국내 사기 진작, 초강대국에 의한 지역적 개입 억제, 경제적 방위부담 경감 등이 지적되고 있다.<sup>115)</sup>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배경에도 이와 같은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재래식 군비의 열세를 극복하고 방위비 부담을 경감하며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과 대외적으로 정치적·군사적 자주성을 확보하며 국제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이나 남한으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처하면서 정권과 체제의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핵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를 집중적으로 표출한 것일 수도 있다.<sup>116)</sup>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국에 더하여 핵을 보유함으로써 대국들 틈에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되었다며<sup>117)</sup> 이러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 3. 경제적 대응: 자립과 실용주의

북한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특히 동북진흥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 심화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이 정치군사적인 자주성을 견지할 토대를 침식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경제협력 심화는 우선 양국 간 무역규모와 비중에서 확인된다. <표 3>

---

11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PRST/2012/13 (April 16, 2012).

114) 신삼호, "中, 北핵실험 반대외사 재차 표명," 「연합뉴스」 (2012.4.26); "中, 북한 핵실험 반대" 「연합뉴스」 (2012.4.29.).

115) Stephen M. Meyer, *The Dynamics of Nuclear Prolifer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p. 48-49.

116) 현성일 (2007), p. 350.

117) 리동찬, "김정일 동지의 혁명 유산," 「로동신문」 (2011.12.28.).

에서 보듯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010년 83%에 달하였다. 2위인 러시아는 2.6%에 불과할 정도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압도적이다.<sup>118)</sup>

〈표 3〉 북한의 10대 무역상대국

(단위: US\$천, %)

국가명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합계		점유율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중국	793,048	1,187,861	1,887,686	2,277,816	2,680,734	3,465,677	78.5%	83.0%
러시아	20,628	26,960	41,060	83,619	61,688	110,579	1.8%	2.6%
독일	26,798	34,368	43,177	24,579	69,975	58,947	2.0%	1.4%
인도	8,108	32,976	52,331	25,500	60,439	58,476	1.8%	1.4%
태국	14,017	21,527	30,273	29,759	44,290	51,286	1.3%	1.2%
싱가포르	1,860	720	55,385	47,777	57,245	48,497	1.7%	1.2%
방글라데시	28,730	36,788	7,277	97	36,007	36,885	1.1%	0.9%
홍콩	29,974	12,358	26,331	18,476	56,305	30,834	1.6%	0.7%
이탈리아	1,219	1,001	23,106	24,728	24,325	25,729	0.7%	0.6%
멕시코	4,615	10,723	927	14,723	5,542	25,446	0.2%	0.6%
10개국합계	928,997	1,365,282	2,167,553	2,547,074	3,096,550	3,912,356	90.7%	93.6%
기타	133,789	148,349	183,479	113,700	317,268	262,049	9.3%	6.4%
총합	1,062,786	1,513,631	2,351,032	2,660,774	3,413,818	4,174,405	100%	100%

\* 10대 무역국은 2010년 수출입합계를 기준으로 작성.

\* 출처: KOTRA, 『2010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KOTRA자료 11-033 (2011년 8월), p. 9.

최근 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진출한 중국기업의 수나 투자규모 등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sup>119)</sup> 대북 투자가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중국은 동북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북한과의 교통일체화를 추구하고, 자국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원개발과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sup>120)</sup> 제

118) 여기에는 남북교역이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 남북교역액 19.1억 달러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7.1%에 달한다(홍익표 외,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2010)』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 100).

119) 중국의 대북투자에 대해서는 Drew Thompson, *Silent Partners: Chinese Joint Ventures in North Korea*, A U.S.-Korea Institute at SAIS Report (February 2011) 참조. 톰슨이 중국 당국의 자료, 중국 투자가들과의 인터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1997년부터 2010년까지 공식적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한 138개의 북중합작기업이 설립되었으며 이 가운데 채취업이 41%, 경공업이 38%, 서비스업이 13%, 중공업이 8%를 차지하였다(Thomson (2011), p. 53).

120)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북한과 중국 간 협력에 대해서는 안병민, “북중 간 경제협력 현황과

조업에 더해 주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상업유통 부문까지 진출하고 있다.<sup>121)</sup>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양국이 경제특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 6월 위화도·황금평경제지대와 라선경제지대 공동개발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였다.<sup>122)</sup>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은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북한의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전략이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중국은 균형개발 차원에서 2001년 서부대개발에 이어 2003년부터 동북진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랴오닝연해경제벨트’와 ‘창춘-지린-투먼개발발전도구’를 개발 중이다.<sup>123)</sup> 이러한 중국의 개발전략은 북중 간 접경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더해 북한 지역이 지닌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할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그 결과 북중 양국은 동서 접경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은 출해통로를 필요로 하였고 이는 라선경제지대의 공동개발과 청진항 공동이용<sup>124)</sup>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중 간의 이러한 경제협력 확대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구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북한의 동북4성화라는 고도의 정치적 기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북중경제협력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갖고 있다.<sup>12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원유나 식량과 같은 전략물자와 원자재 등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sup>126)</sup> 시장에

---

향후 발전 전망: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정책포럼 발표문 (2011.8.18.). 북한과 중국 간 인프라구축 협력의 대표적 사례인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보면, 중국은 1단계(단동-신의주)와 2단계(신의주-평양), 3단계(평양-개성)로 나누어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주요 간선 축과의 연계를 통해 대북경제협력 확대뿐 아니라 한반도(남북)와 중국 간 연계발전과 협력심화까지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안병민 (2011), p. 18). 북한과 중국은 만포-지안 간 다리도 공동으로 건설하고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조선과 중국 만포-지안국경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인,” 『조선중앙통신』 (2012.5.10.)).

121) 홍익표 외 (2011), pp. 103-110.

122)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와 라선경제무역지대 조중공동 착공식,” 『조선중앙통신』 (2011.6.9.). 두 경제지대 개발 배경과 현황에 대해서는 홍익표 외 (2011), pp. 111-122; 안병민 (2011); 원동욱,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대북협력 확대의 현황 및 과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0차 전문가포럼 발표문, (2011) 등 참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11년 12월3일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을 채택하고(정령 2006호), 1993년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수정, 보충하였다(정령 2007호).

123) 랴오닝연해경제벨트는 2009년 7월 국무원 승인을 받았고 창지투 개발개발 선도구는 2009년 8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다.

124) 북한은 2010년 청진항을 중국에 임차하여 중국의 투먼에서 북한의 남양과 청진으로 이어지는 물류 체계 구축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명, “2000년대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및 영향 분석,”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공동 주최 “북한 시장경제의 현주소와 발전 전망” 학술회의 발표문 (2011.7.15.), p. 67-68). 중국의 청진항 이용은 단순한 물류차원을 넘어 북중 간의 군사협력 차원에서 중국이 동해로 진출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사안이다.

125) 이희욱, “중국의 대북한정책 변화의 함의: 동북4성론 논란을 포함하여,” 『현대중국연구』 제8집 2호 (2006) 참조.

126) 홍익표 외 (2011), p. 101; 임명 (2011), pp. 57-60.

서 판매되는 공산품의 70%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점에서<sup>127)</sup>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조차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자생적인 산업생산 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투자 확대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북한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세력이 될 수 있는 러시아와 천연가스관통과,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중단철도 연결, 라진항 공동개발 및 이용, 러시아의 극동지역 잉여전력 수입 등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한편<sup>128)</sup> 대내적으로는 경제자립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sup>129)</sup> 국방위원회 주도 하에 2010년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여<sup>130)</sup> 국가경제개발의 전략적 목표를 담은 국가개발10개년 계획<sup>131)</sup>을 수립, 추진하고 조선대풍국제그룹<sup>132)</sup>을 통해 이에 필요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0년 7월 내각 산하 합영투자국을 무역성과 동급의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켜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sup>133)</sup>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협력을 다변화시키면서 내부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국제적 제재와 압박, 그에 따른 고립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기반 구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경제협력의 다변화와 산업기반 재구축을 지속적으로 모색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127)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서울: 금융경제연구원, 2007), p. 10.

128) 홍익표 외 (2011), pp. 262-270. 이에 더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도 경제적 실리 극대화라는 측면과 함께 대중국 의존도 분산을 위한 북한의 자구적 움직임일 수 있다.

129) 한치일, “현시기 원료, 연료의 주체화, 국산화는 자립경제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제154호 (2012년 제1호); 좋은벗들, “국산품으로 수출품을 밀어내라,” 『오늘의 북한소식』 제450호 (2012.4.11.).

130) “국가개발은행 리사회 제1차회의,” 『조선중앙통신』 (2010.3.10.).

131) 김치관. “단독입수: 북 대풍그룹 ‘2010-2020 북한 경제개발 중점대상.’” 『통일뉴스』 (2011.10.6.). 2010년 내각 결정으로 채택된 국가개발10개년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김책광업제련단지, 청진중공업지구, 나선석유화학공업지구, 남포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철도 4,772km, 도로 2,490km를 건설하며 평양국제공항을 연인원 1,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하고, 에너지 부문에서는 연간 4,000만 톤 생산규모로 탄광을 개발하며 60kW 화력발전소 10기를 건설하여 600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1,500km에 달하는 송전망도 건설할 예정이며 농업부문에서도 농약공장, 종자기지, 종합기계공장 등을 건설하고 축산업을 진흥시킬 계획이다.

132)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리사회 제1차회의,” 『조선중앙통신』 (2010.1.20.).

133)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개편,” 『조선중앙통신』 (2010.7.8.); 정무현. “합영투자위원회 김지혁 연구원에게서 듣다, 강성대국건설 위한 외자유치.” 『조선중앙통신』 (2011.6.22.).

#### IV. 결론: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정치적·외교적 위험성들을 회피하기 위한 헤징전략을 다방면에 걸쳐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헤징전략은 비용을 발생시킨다.<sup>134)</sup> 북한이 지불하고 있는 가장 큰 비용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압박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고립이며 군사적 균형을 위한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과 경제회복 지체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헤징전략의 토대를 약화시키면서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 의존도 심화가 그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핵개발 등 내적균형정책에서 벗어나 과감한 개혁개방을 시도하지 않는 한 자주와 의존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형국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헤징전략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를 던지고 있다. 첫째, 대외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북한은 단기정세와 무관하게 남북관계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이 가속되면 될수록 그 수요는 커질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중국 헤징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남북러 경제협력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북한은 또한 중국을 견제할 균형자로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다. 북한은 탈냉전기 들어 미국을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분산 대상이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고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함뿐 아니라 특히 중국의 부상에 대한 헤징 차원에서라도 미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계와 대응을 적절히 활용하여 북한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 차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에 던지는 함의이다. 현재와 같이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1953년 정전협정에 따른 한반도의 분단선은 동북아 세력균형선일 수 있다. 반면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수립된다면 동북아의 세력균형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반도가 더 이상 동북아 세력균형의 대치점이 아

134) Brock Tessman and Wojtek Wolfe (2011), p. 220.

나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정과 협력 촉진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평화적 공존과 협력의 모멘텀을 제공할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중국 헤징전략이 적절히 활용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향해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동북아 불안정의 중요한 진원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헤징전략의 일환으로도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단순히 외부의 침공에 대한 안보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대내 정치적 성격과 함께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체제와 정권의 생존을 위한 선택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허약한 경제적 토대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발전하면 할수록 정치적·군사적 차원의 자주성 견지를 위한 핵무기 개발에 북한이 더욱 매달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핵문제의 기본적 해법은 북한이 자주와 의존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놓여 있을 수 있다. 그 핵심은 북한 경제발전일 수 있다. 경제발전은 중장기적으로 사회변동을 수반하고 정치적인 변화를 위한 구조들을 창출하여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을 열 수 있다. 대외적으로 평화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경제를 점진적인 성장궤도로 올려 세울 수 있는 내적 개혁개방 촉진과 외적 협력 확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와 정권의 불안정 문제를 일정하게 해소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변화와 핵 포기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sup>19)</sup>

## 북한 자주-의존 딜레마와 헤징전략 토론문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과 중국관계를 북중관계 또는 중북관계로 표현하기도 한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중북관계’의 비대칭성을 주목하거나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북한의 대중국 정책을 간과했다. 이것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기존의 중북관계 연구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북한의 대중국태도에 나타난 의미를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함의를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간단한 질문이다. 첫째, 북중간 신뢰와 유대가 단절되고 전략적 이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북중관계가 재(再)정상화 되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중국이 북한의 헤징전략에 굴복한 결과인가, 중국이 미중관계 속에서 지정학적 가치를 다시 주목한 것인가, 완전한 이익균형을 달성한 것인가, 그리고 지정학적 가치의 층위는 어디인가. 둘째, 북한의 이른바 ‘전략적 요충지론’은 북한의 지정학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정학적 가치는 상대국의 존중과 주목을 받을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셋째, 북한의 헤징을 정치적 자주,

외교적 연성균형, 군사적 내적균형, 경제적 자립과 실용주의로 접근하고 있다. 헤징은 보다 탄력적이고 위험을 분산하는 것(※중국어로는 두 개의 도박판에 동시에 판돈을 거는 의미로 兩面下注라고 한다)이라면 4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분류는 다소 기계적이다. 따라서 선군정치=자주=정치적 헤징으로 보는 것도 일반화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지?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중국의 대북한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북한정책이 일관된 원칙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오해이다. 중국의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 정교한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는 배외주의(nativism)에서 글로벌리즘(globalism)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도 정보를 투입하는 과정에서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2009년 하반기 이후의 중국의 대북정책도 북한에 대한 신호체계의 이상을 바로잡고 좀 더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국내정치, 미중관계, 한중관계,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북한 정책도 변화의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다양한 영향력 수단을 가지고 있다(청화대학의 추수룽 교수가 제3차 핵실험 시 경유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발언). 그러나 양국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은 주변지역전략 속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를 다시 주목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수단을 사용하는 순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영향력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2006년 핵실험과 2009년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한 비난과 대북제재결의에 참여한 결과 속에서 이러한 것을 학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보는 북한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단일패권체제가 점차 약화되고 있고 중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를 무극(non-polarity)의 징후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는 중국부상의 이미지와 실체를 구분하지 않는 논리의 비약이 있지만, 적어도 생활권(Labensraum)으로 간주하는 동아시아에서는 힘의 분포가 빠르게 변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중동의 전선을 닫고 동아시아로 복귀한 것도 바로 빠르게 부상하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영토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안보경쟁은 이러한 새로운 역학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바로 이러한 동아시아 구조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었다. 북한은 부상한 중국이라는 후원(後苑)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도 새로운 미중관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주목했다. 후진타오 체제가 김정은 체제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 북한을 근본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미 권력계

승을 제도화한 중국은 북한의 후계세습체제에 불만이 있었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행위를 비판했으며, 선군정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을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정책 속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졌고, 사실상의 동맹인 북한에 대한 포기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을 정상국가를 위해 길들이기보다는 안고 가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러한 중국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을 거친 학습의 결과였다. 당시 중국은 북한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압박했다. 그러나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북미접촉을 통해 활로를 찾고자 했으며 그 결과 중국배제론(China passing)이 현실화되었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인 대북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 영향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북중관계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2009년 7월 이후 북중관계를 다시 회복한 후, 중국은 북한의 모험적 행동과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구사했다. 천안함, 연평도, 2012년 4월 로켓발사에 대한 중국의 신중한 접근은 이러한 새로운 북한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북중 양국은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며 고위급 전략대화를 제도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사이에는 동상이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에서 지적한 바대로 개혁개방과 체제안전에 대한 인식,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다. 중국은 북한이 당-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좀 더 개방적인 방식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면 체제안전의 공간이 넓어질 것이며, ‘부족의 경제’ 속에서 안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 북한은 주변강대국의 안보위협이 존재한다고 보고, 군사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도 흡수통일과 체제붕괴유도에 대한 경계심이 있고, 미중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중국의 대북한 태도에 대해서도 불신감이 남아있다.

이처럼 북한은 자주와 의존의 딜레마, 동맹의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따라서 중국을 결박한 상태에서 활로를 타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4월, 북미간 ‘2.29합의’ 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쏘아올린 것도 일시적으로는 국제적 고립이 강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사능력을 과시하면서 북미간 관계정상화 내지 평화체제라는 협상의 판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트랩에 갇힌 중국은 대북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2009년 4월의 로켓발사와 비교해 볼 때, 유엔의장 성명에 ‘강력하게 규탄한다(strongly condemn)’ 는 내용을 신속하게 추인한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도 이미 1874호 결의안이 발효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력이 없었다. 오히려 중국은 ‘냉정과 절제’ 를 강조하는 한편 제3차 북핵실험을 막는 데 주력했고, 북한체제가 안정화되는 대로 김정일이 남긴 ‘선군정치’ 의 유산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북한관 개혁개방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황금평과 나선지역의 개발과 중국의 대북투자의 확대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대북한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취약한 국내기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할 때, 북한체제의 안정을 통한 한반도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중관계, 동아시아의 핵보유 경쟁, 중국을 겨냥한 북한위협론, 양안관계와 같은 요소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변화지 않는 한, 중국이 먼저 바꿀 가능성은 낮다.

2012년 10월에는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제5세대가 등장한다. 시진핑은 전임 국가주석이나 총서기와는 달리 최고권력을 가진 지도자는 아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이 강하거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 이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진핑의 대북정책은 독자적이라기보다는 현 후진타오 2기체제의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은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보시라이 실각과 같은 국내정치의 변수 때문에 대외정책의 폭도 제약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대체로 북한체제 안정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기본방침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도 분리하여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P

● 미·중 강대국 상호 헤징과 남북한 한반도 정치

-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서울: 국방부, 1995).
- 백종천 외, 『한·미 군사협력: 현재와 미래』 (성남: 세종연구소, 1998).
- 유인택,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96).
- 유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강성학 외,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 (성남: 세종연구소, 1996).
- 이수형, “동아시아 안보구축에서 강대국과 중견국의 헤징전략과 이중적 안보 딜레마,” 미발표논문.
- 이수형, “관계적 계약이론과 한미 전략동맹에서의 잔여통제권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 27권 제3호, 2011년.
- 이수형, “중견국가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노무현정부의 동맹재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2권 제1호, 2009년.
- 이수형,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구조조정방안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40집 3호, 2000.
- 이수형,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 이종석,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발생 원인, 양상, 전망,” 백학순·진창수 편,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성남: 세종연구소, 1999).
- 주평, “중북관계에서의 동맹요소: 변화와 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중북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과 한미동맹 논문집』, 2011년 9월 1일.
-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9).
- Atanassova-Cornelis, Elena, "Reshaping the East Asian Security Order: US-China Hedging and the EU's Strategic Choices," *Ritsumeikan International Affairs*, 10(2011).
- Clinton, Hil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189, November 2011.
- Denmark, Abraham M., "Asia's Security and the Contested Global Commons," in Ashley J. Tellis, Andrew Marble, and Travis Tanner(eds.), *Asia's Rising Power and America's Continued Purpose* (Washington, D.C.: The National

- Bureau of Asian Research, 2010).
- Denmark, Abraham M., "China's Arrival: A Framework For A Global Relationship," in Abraham M. Denmark and Nirav Patel(eds.), *China's Arrival: A Strategic Framework For A Global Relationship*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09).
-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7th, 2012.
-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6, 2006.
- Foot, Rosemary, "Chinese Strategies in a US-hegemonic Global Order: Accommodating and Hedging," *International Affairs*, 82-1(2006).
- Friedberg, Aaron L., "The Geopolitics of Strategic Asia, 2000-2020," in Ashley J. Tellis, Andrew Marble, and Travis Tanner(eds.), *Asia's Rising Power and America's Continued Purpose* (Washington, D.C.: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0).
- Goh, Evelyn, "US Strategic Relations with a rising China: Trajectories and Impacts on Asia-Pacific Security," in Kevin J. Cooney, Yoichiro Sato(eds.), *The Rise of China and International Security: America and Asia Respo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 Goh, Evelyn, "Understanding hedging in Asia-Pacific security," *PacNet* 43, August 31, 2006.
- Goh, Evelyn, *Meeting the China Challenge: The U.S. in Sou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Policy Studies 16 (Washington: East-West Center, 2005).
- He, Kai, "Institutional Balancing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Balance of Power Strategies in Southeast Asi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4-3(2008).
-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Kirshner, Jonathan(ed.), *Globalization and National Security* (New York: Routledge, 2006).
- Layne, Christopher, "Graceful Decline: The end of Pax Americana," *The American Conservative*, 9-5(May 2010).
- Layne, Christopher, "The Waning of U.S. Hegemony-Myth or Realist?: A Review

- Essay," *International Security*, 34-1(Summer 2009).
- Lieberthal, Kenneth and Wang Jisi,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2).
- MacDonald, Paul K. and Joseph M. Parent, "Graceful Decline?: The Surprising Success of Great Power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35-4(Spring 2011).
- Medeiros, Evan S., "Strategic Hedging and the Future of Asia-Pacific Stability," *The Washington Quarterly*, 29-1(Winter 2005-2006).
- Schweller, Randall, "Realism and the Present Great Power System: Growth and Positional Conflict over Scarce Resources," in Ethan B. Kapstein and Michael Mastanduno(1999).
- Scobell, Andrew, "China and North Korea: the Limits of Influence," *Current History*, 102-665, September 2003.
-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July 1984).
-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For Global Supply Chain Security*, January 2012.
-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6, 2006.
- Xuetong, Yan, "The Rise of China and Its Power Statu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1(2006).
- Zakaria, Fareed,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8).

## ● 북한의 자주-의존의 딜레마와 해징전략

- 국방부. 『국방백서 2010』 서울: 국방부, 2010.
- 김강일. “북·중관계 현황과 변화전망,”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의식” 학술회의 발표문 (2010년 10월)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외교의 선택』 서울: 백산서당, 2002.
- 김동성.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 김영윤.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한국의 과제.” 『정책과학연구』 제20집 (2)호 (2011).
- 김예경.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대응전략: 편승전략과 동맹, 유화 그리고 현안별 지지정책.” 『國際政治論叢』 제47집 2호, (2007).
-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년 5월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 선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김홍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역할,” 제122회 홍사단 금요통일포럼 발표문 (2012.3.23.). <http://uni.yka.or.kr/yka/board.php?board=pdsforum&command=body&no=57> (검색일: 2012.4.2.).
- 나미나. “일본의 대북외교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1월호.
- 남성욱.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統一問題研究』 통권 제45호 (2006년 상반기호).
- 리기성. “라선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의 기본 거점.” 제10차 코리아학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2011.8.24.-25).
- 박창희. “지정학적 이익 변화와 북중동맹관계: 기원, 발전, 그리고 전망.” 『중소연구』 통권 제113호, (2007, 봄).
- 배종렬.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특징과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10년 겨울호).
- 변상정.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추진 동향과 전망.” 『군사논단』 제67호 (2011년 가을).
- 서보혁. “북중러 3국의 협력 실태에 관한 세 가지 질문.” 『통일과 평화』 제3집 (2)호 (2011).
- 송현철. “동북아시아 지역 내 경제협력의 강화와 조선반도중단철도.” Tumen River Academic Forum 2011 발표 논문집 (2011.8.21.-22).
- 안병민. “북중 간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정책포럼 발표문 (2011.8.18.).

- 오승렬. “북중경제관계의 구조와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소고.” 『북한연구학회보』 제 14권 (1)호 (2010).
- 원동욱. “동북공정의 내재화, 중국 동북지역 인프라개발의 전략적 함의.” 『國際政治論叢』 제49집 (1)호 (2009).
- 원동욱.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대북협력 확대의 현황 및 과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0차 전문가포럼 발표문, (2011).
- 우승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한울, 2009.
- 유승경.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 깊어지고 있다.” 『LGERI 리포트』 (2010.9.29.).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JPI 정책포럼 No. 2011-15, (2011).
- 이상숙. “북미관계 개선 이후 북한의 대중정책: 미중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4권 1호, (2008).
- 이상숙.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불안정한 북한과 부강한 중국의 비대칭적 협력 강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4호, (2010, 겨울).
- 이상숙. “북중우호조약의 현대적 함의와 양국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2011 가을호.
-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서울: 금융경제연구원, 2007).
- 이용희. “북한 경제의 중국 예측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국제통상연구』 제14권 (1)호 (2009).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 이종석.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 특징과 함의.” 『정세와 정책』 (2011년 7월호).
- 이태환. “북중관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대외관계』 서울: 한울, 2007.
- 이희욱. “중국의 대북한정책 변화의 함의: 동북4성론 논란을 포함하여.” 『현대중국연구』 제8집 2호 (2006).
-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서울: 중앙북스, 2008.
- 임 명. “2000년대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및 영향 분석.”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 공동 주최 “북한 시장경제의 현주소와 발전 전망” 학술회의 발표문 (2011.7.15.).
- 장공자. “북한의 대중협상전략과 우리의 대응전략.” 『통일전략』 제9권 (2호) (2009).
- 장달중 외. 『북미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11.
- 전재성.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국방연구』 제 51권 3호, (2008).
- 정우곤. “김정일 정권의 국가발전전략: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

- 20권 (4)호 (2004).
-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1.12.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7호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2011.12.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6호로 채택).
-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대한 연구.” 『國際政治論叢』 제48집 1호, 2008.
-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 최명해. “북한의 대중 의존과 중국의 대북영향력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 여름호).
- 최종건. “북한의 세계관에 나타난 국제정치이미지 분석-이미지 이론을 중심으로.” 이수훈 편.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질서』 서울: 한울, 2011.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한치일, “현시기 원료, 연료의 주체화, 국산화는 자립경제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제154호 (2012년 제1호).
- 함형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반도비핵화 전망.” 제26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정책포럼 발표문 (2012.3.13.).
- 허문영·마민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 홍익표 외.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2010)」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홍현익.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과 북·러의 전략.” 『세종논평』 (2011.8.22.).
- 매들린 울브라이트. 백영미 외 역. 「마담 셰크리터리(Madam Secretary)」 서울: 황금가지, 2003.
- KOTRA. 『2010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KOTRA자료 11-033 (2011년 8월).
- 어우양산 저. 박종철·정은이 공역. 『중국의 대북조선 기밀파일』 서울: 한울, 2008.
- 朱鋒, “中朝关系中的同盟因素: 变化与调整,” 『중북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과 한미 동맹』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2011.9.1.).

- Brooks, Stephen G. and William C. Wohlforth. "Hard Times for Soft Balancing." *International Security* 30-1 (Summer 2005).
- Chung, Chien-peng. "Southeast Asia-China Relations: Dialectics of Hedging and Counter-Hedging." *Southeast Asian Affairs* (2004).
- Goh, Evelyn. "Understanding Hedging in Asia-pacific security." *PacNet* 43 (31 August, 2006).
- Hecker, Siegfried S.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November 20, 2010). <http://iis-db.stanford.edu/pubs/23035/HeckerYongbyon.pdf> (검색일: 2011.11.5.).
- Heginbotham, Eric and Richard J. Sammuels, "Japan's Dual Hedge." *Foreign Affairs* 81-5 (September/October 2002).
- Hendel, Michael. *Weak Stat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ass, 1981).
- International Crisis Group.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Asia Report No. 112 (1 February 2006).
-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 (2 November, 2009).
- Kim, Samuel S. and Tai Hwan Lee.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 Kim, Sung Chull.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China: From Alignment to Active Independence." in Lam Peng Er and N. Ganesan, Colin Dürkop (eds.). *East Asia's Relations with a Rising China*. Seoul: Konrad Adenauer Stiftung, 2010.
- Kuik, Cheng-Chwee. "The Essence of Hedging: Malaysia and Singapore's Response to a Rising Chin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30-2 (2008).
- Lam Peng Er, Narayanan Ganesan, and Colin Dürkop, "Introduction: China and East Asia's Mutual Accommodation." in Lam Peng Er and N. Ganesan, Colin Dürkop (eds.). *Facing a Rising China in East Asia*. Seoul: Konrad Adenauer Stiftung, 2010.
- Lindell, Ulf and Stefan Persson. "The Paradox of Weak State Power: A Research and Literature Overview." *Cooperation and Conflict* 21-79 (1986).
- Manning, Robert A. and James J. Przystup, "Asia's transition Diplomacy: Hedging Against Future shock." *Survival* 41-3 (Autumn 1999).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Y.: W. W.

- Norton & company, 2001.
- Medeiros, Evans S. "Strategic Hedging and the Future of Asia-Pacific Stability." *The Washington Quarterly* 29-1 (winter 2005-2006).
- Meyer, Stephen M., *The Dynamics of Nuclear Prolifer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Nadkarni, Vidya. *Strategic Partnerships in Asia: Balancing without Alliances*. New York, N.Y.: Routledge, 2010.
- Roy, Denny, "Southeast Asia and China: balancing or Bandwagoning?"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7-2 (2005).
- Scobell, Andrew. "China and North Korea: The Limits of Influence." *Current History* (September, 2003).
- Tessman, Brock and Wojtek Wolfe. "Great Powers and Strategic Hedging: The case of Chinese Energy Security Strateg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3 (2011).
- Thompson, Drew. *Silent Partners: Chinese Joint Ventures in North Korea*. A U.S.-Korea Institute at SAIS Report (February 2011).
- Toje, Asle. "The EU Strategy Revised: European Hedging in Its Bets."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5 (2010).
- Tokola. "HYUNDAI CHAIRWOMAN ON DPRK TRIP, KIM JONG-IL." U.S. Embassy Seoul Cable (Reference ID: 09SEOUL1386, 2009.8.28.). <http://wikileaks.org/cable/2009/08/09SEOUL1386.html> (검색일: 2012.3.30.).
- Womack, Brantly. "Asymmetry Theory and China's Concept of Multipolarit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3-39 (May 2004).
- Womack, Brantly. *China among unequals: asymmetric foreign relationship in Asia*. Singapore; Hackensack, N.J.: World Scientific, 2010.
- You Ji.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s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28 (2001).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조선일보』, 『통일뉴스』, 『한겨레신문』, 『오늘의 북한소식』

Xinhua.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4차 전문가포럼|

**중국의 부상과 주요국의 대응전략:**

해징전략을 중심으로

# NOTES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4차 전문가포럼 |

**중국의 부상과 주요국의 대응전략:**

헤징전략을 중심으로

NOTES